

권두 인터뷰

권영세 통일부장관

신년대담

2023년 한반도 전망과 과제

만나고 싶었습니다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

민주화해

120 vol
2023.1+2



민족화해

16



60



28



06



70



64

민족화해 2023년 1+2월호(격월간, 통권 120호)

등록번호 마포, 마00101

발행일 2022년 12월 21일

발행인 이종걸

편집인 원희복

편집기획위원 김용현, 박인휘, 이승현, 전영선, 정구연, 조남훈, 최지영

발행기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3층

전화 02-761-1213

홈페이지 www.kccr.or.kr

디자인 및 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 본지에 수록된 글들은 민화협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



24



Cover Story

1998년 창립한 민화협이 2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민화협은 남북관계의 수많은 부침 속에서도 민족의 화해와 남남대화를 위해 묵묵히 한 길을 걸어왔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다시 민화협은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통일미래'를 위해 나아가고자 한다. 그 길에 변함없는 응원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 02 편집인 칼럼** | 원희복
새해에는 남북이 맨얼굴로 봅시다
- 04 포토에세이** | 조천현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 06 권두 인터뷰** | 편집부
권영세 통일부장관
한반도 미래 위한 초당적 통일정책기반 수립,
민관이 협력해야 가능해
- 12 기획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
 - 1. 생태공동체로서의 남북한 기후대응 협력방안,
자연기반해법(Nbs) | 명수정
 -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방안 | 최형순
 - 3. 북한 농업의 이상기후 대응과 협력과제 | 김영훈
- 24 만나고 싶었습니다** | 편집부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
민족화해와 협력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
- 28 신년 대담 - 2023년 한반도 전망과 과제** | 김도희
북한 의도와 대내외 정세 판단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바탕으로 과감한 행동 필요해
- 34 우리의 역사** | 박 환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
- 36 청년 칼럼** | 추재훈
이런 세상에서 통일이 가능할까
- 38 이슈앤포커스** | 정구연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 42 새로운 시선** | 김태윤
한국전쟁 이후 수도 평양의 탄생과 상징공간 조성
- 46 문화모니터**
문학속 통일미래 ④6 | 오태호
우표로 보는 남과 북 ⑥0 | 이상현
영화 속 북한 이야기 ⑥2 | 전영선
- 56 민족화해 네트워크**
- 62 회원단체 소식** | 윤은주
- 64 돌아보기**
 - 1. 금강산관광 개시 24주년의 의미 | 백천호
 - 2. 남북 하나로 묶는 월드컵 유치로
한반도 평화 만들자 | 김동선
- 70 평화를 만나는 기행** | 이영동
서해에서 평화기행 김포·강화 한강하구를 가다
- 74 편집부 이야기** | 염규현
- 76 민화협 사서함** | 편집부



새해에는 남북이 맨얼굴로 봅시다

원희복 <민족화해> 편집인·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검은 토끼해라 합니다. 역학상 ‘습’, 즉 불만이 많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라는데 이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흔히 한 반도를 토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끼 해는 한반도의 해가 됩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새해부터는 그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마치 환자처럼 혹은 범죄자처럼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했던 긴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친구 사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악수도 못 했던 단절의 시대가 끝납니다. 이제 서로 맨 얼굴을 보고 반갑게 악수하며 못했던 말도 속 시원히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19로 수척해진 얼굴이면 어떻고, 사업 부진으로 찌그려진 얼굴이면 어떻습니까. 지친 허탈감을 달래줄 사람은 당신의 친척과 이웃입니다.

토끼의 해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남북 관계는 ‘최악’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북측은 외교관계에 벗어난 거친 표현을 넘어 대통령에게 심각한 조롱까지 했습니다. 남측은 선제타격을

공약했고, 유사시 원점 및 지휘부 타격을 말했습니다. 급기야 북측은 남측을 ‘과녁’으로, 남측은 북측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남측이 <국방백서>에 북이 주적임을 삭제하고, 북측은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를 삭제한 것에 비하면 거꾸로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말과 서류상의 문제뿐 아닙니다. 남측의 한미 연합훈련 대응이라 하지만 북측은 연이어 방사포를 쏘고, 가공할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선보였습니다. 남측은 독도 해상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미국 최첨단 전략 자산이 한반도 상공에 여러 차례 출격했습니다. 우리도 지하 수십 미터 병커를 파괴하는 최첨단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지난 호 본란 제목이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였겠습니까.

좋습니다. 지난해 남북은 말로나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이제 북측이 보여주고 싶은 것, 혹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핵 실험이요? 그것은 이미 했으니, 고도화 수준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기 실무자들이



2018년 8월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2회차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금강산호텔에서 열린 작별상봉 및 공동 중식을 마친 남북의 이산가족이 작별인사를 한 뒤 눈물을 두고 있다.
©연합

나 관심이지 큰 틀의 정치에서 뭐 그리 중요할까요. 요즘 미국에서조차 북의 핵 보유 사실을 인정하고 협상하자는 논의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은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특히 북측은 남측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실체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쓸모없는 말폭탄으로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미국도 선거가 끝나 당분간 큰 정책 변화가 없을 겁니다. 일본은 북의 고려 대상조차 아니지만, 그 역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남북이 깨달아야 합니다. 남북이 더이상 보여줄 것이 남았다면 그것은 '민족의 공멸' 뿐이라는 것을. 그것은 남북의 그 어떤 세력도 원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더이상 '으름장'은 소모적인 낭비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해에는 남북도 마스크를 벗고 서로 맨얼굴을 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은 맨얼굴로 서로의 맨몸뚱이 즉 민족문제를 서로의 민족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것은

남북의 정치 위정자들이 민족문제를 자신의 정략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78년 갈등과 왜곡으로 꼬인 민족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것은 민족화해에서 시작한다는 평범한 이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북측이 자존심 강한 것은 알지만 최소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대화의 끈이라도 유지해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절감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측 동포가 가장 믿을 상대입니다. 남측도 맨얼굴로 봐야 합니다. 민족문제는 외부가 만든 참담한 상황이지만 해결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민족문제는 내가 주인공이며 내 일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뤄내야 합니다.

남북화해에 노력하시는 통일일꾼들, 새해에도 강건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질곡으로 꼬인 민족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실무자입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야 남북화해도 교류도, 그리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새해에 좋은 성과를 기대합시다. 🌈

31 **접경지역에서 바라보는 북한**
조천현 PD



조천현은 조·중국경을 다니는 PD로 KBS 일요스페셜 〈현지르포, 두만강변 사람들〉, SBS 스페셜 〈5년의 기록, 압록강 이천리 사람들〉 등을 연출했다.

해지는 화전마을

한 해 농사를 갈무리하고
새해 농사 준비로 바쁘던
압록강변 삼수군 포성노동자구 화전마을,
'거름내기전투'가 끝난
들판에 붉은 해가 저문다.



양강도 삼수군 포성노동자구 화전



권영세 통일부장관

지난 12월 13일 개최된 민화협 창립 24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성현)

한반도 미래 위한 초당적 통일정책기반 수립, 민관이 협력해야 가능해

지난해 5월 취임 후 통일·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며, 실재 없이 국내외 현장을 누빈 권영세 통일부장관. 권 장관은 보수와 진보를 나누지 않는, 우리 민족의 평화로운 통일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초당적인 통일정책 기반 수립을 강조했다. 남북의 긴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떠한 사안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장관. 2023년 신년을 맞아 권 장관과의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통일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Q | 2022년 5월 16일 취임하신 후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지난 6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남북관계가 딱 막혀 있고 풀어갈 실마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수 정부의 통일 부장관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인지 예상은 했습니다만, 그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북한의 태도가 경직돼 있어서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저는 처음 통일부장관에 내정됐을 때부터 통일·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어떤 분야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출발하기도 했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제가 통일부장관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원칙과 전통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초당적 협력이 가능해지고, 북한도 우리에게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담대한 구상’을 다듬는 데 힘썼고, 북한이 도발을 반복할 때도 인도적 협력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면서 북한에 꾸준히 대화의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동시에 우리 내부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통팔달’을 비롯해 초당적인 통일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공을 들여왔으며, 지난 9월에는 통독 32주년을 맞아 독일을 방문해서 우리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썼습니다. 북한이 계속 도발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아쉽지만, 장관직을 떠나는 그 날까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여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 지난해 11월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통제 추진 등의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총체적으로 담아 수립한 새로운 구상입니다. 경제지원뿐 아니라,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내세우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근본적인 쉼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단순히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의 호응만을 기다리는 접근에 머무르지 않고, 북한의 핵 위협은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을 단념(dissuasion)시키며, 대화(dialogue)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구상은 선제적·포괄적 평화 구축 전략

Q | 담대한 구상이 역대 정부 대북정책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담대한 구상이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차별화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제적인 초기조치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지난 12월 7일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등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장관. (통일부 제공)

북귀하면 비핵화 실행 이전의 초기 단계부터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경제·재정·인프라·교육·생활향상 등 주로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핵 개발의 구실로 내세우는 안보 우려를 고려하여 정치·군사 조치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지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서 동시적·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해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역대 어느 정부의 통일·대북정책보다도 과감하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담대한 구상의 정치·군사적 조치의 내용에는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전향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보수정권들은 원칙을 중시하다 보니 정치·군사적 조치에 소극적이었고, 반면에 진보정권들은 유연한 차

세는 갖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내지 못해 실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진보정권들보다 유연한 자세로 북한의 신뢰를 얻어내는 동시에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해서, 과거 어느 정권보다 큰 남북관계 진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Q |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이어달리기를 토대로 북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가능한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추진 의지를 수차례 밝히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정부들의 성과를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발전시킨 그린데탕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이어달리기’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 녹색성장, 환경공동체 건설, 탄소중립 등 키워드를 통해 기후환경 문제에 남북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그린데탕트 정책 역시 이를 발전적으로 승계하려는 것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큰 틀은 유지하면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안보적 측면’과 ‘북

한 주민의 민생개선 측면'으로 확장하고, 그에 기초한 평화정착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단계에서부터 식수 위생, 산림, 농업 등 남북 그린테탕트 협력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도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당국 간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만큼, 당국 간 접근 외에도 국제사회 공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접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남북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고, 비정치적·인도적 분야 협력의 출발선이 될 수 있으므로, 그린테탕트 추진을 통해 남북 간 신뢰회복의 첫발을 잘 내디딘다면, 궁극적으로 비핵·평화 변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길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민생협력,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아

Q | 북한의 도발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남북민생협력의 토대가 구축되면 한반도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큰 남북관계 발전도 이뤄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남북 민생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으로 어떠한 것들을 추진하고자 하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핵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현안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갖

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면서도 반드시 필요한 협력분야입니다. 분단 당시 한반도의 북쪽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까지 질병과 결핍의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같은 민족인 동포로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까지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을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와 같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 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방역·보건 협력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영유아, 산모 등 취약계층 대상 인도적 지원, 주요 감염병 대응 등의 보건의료 협력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식량, 비료 지원도 언제라도 북한이 요청하면, 북한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불필요한 자존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생색내지 않는 지원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기구, NGO 등을 통한 지원에도 적극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초기조치와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 이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초기조치부터 시행할 계획인데,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

개선 시범사업」 등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펼쳐갈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여 비핵화의 정의와 최종목표(End State), 단계별 로드맵 등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포괄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단계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맞물려 우리의 경제·정치·군사적 조치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제적 조치로는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①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②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③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④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⑤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치·군사적 조치로는 비핵화 단계에 맞춰 미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논의를 시작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경우 평화협정 체결과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Q | 평소 가지고 있는 통일 철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 MZ세대들의 통일 의식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사로 재직하던 1992년, 독일로 1년간 파견을 나가 통독의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이후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고민해왔습니다. 서독의 진보정부가 보수정부가 힘을 모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켰던 대동독 정책, 통일을 향한 의지를 끝까지 지켜 낸 동서독 국민들의 하나 된 모습 속에 바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안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하고, 최근에는 남북관계에 관심을 끊고 통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어달리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초당적 통일정책을 통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2030세대의 통일 인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취임 후 많은 청년들을 만나보니 통일문제에 무관심하다기보다는 젊은 세대에 맞는 통일 공론의 장이 부족하고, 기성세대가 통일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결코 부족하지 않고,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극 제안하는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통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자 미래 통일한국의 주인공은 결국 우리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통일부는 통일의 청사진을 그리고 준비해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2030세대와 긴밀히 소통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통일부장관으로서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화협, 국민의 마음 모으는 든든한 동반자 되어주길

Q | 2023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신지요. 아울러 2022년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민화협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도록 꾸준히 설득 하면서, 딱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아주 소소하고 낮은 단계부터라도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작은 것부터 북한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당장 당국 간 접촉이 어렵다면 민간 분야의 접촉이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속 추진해온 「담대한 구상」의 동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이행의 단계로 나아가 수 있도록 집중할 것입니다. 2022년 여러 방안을 고민하며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북한이 언제든 대화에 응하면 이를 즉각 이행에 옮길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 확보 등 우리 내부의 실천 동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국제사회의 연대가 없이는 실천이 어려운 과제인 만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 차원의 통일 외교를 보다 강화할 생각인데, 필요하다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를 직접 방문해서 「담대한 구상」을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입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정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사망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등 분단으로 인한 거주 이전의 자유 제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30년을 내다보면서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재정립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새로운

진영구도 형성과 기후변화와 질병 등 신안보 사안의 등장으로 국제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자유와 인권 등 가치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윤석열 정부 5년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보다 장기적인 통일외교안보 전략과 기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제대로 실천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부도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지만, 시민사회의 초당적 협력이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만큼, 창립 24주년을 맞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역활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민화협이 민간 통일운동을 선도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데 앞장서 오셨고, 제가 장관에 취임한 후 초당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도 민화협이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이자 협력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구심이 되어주시고 세대·이념·정파를 뛰어넘는 초당적 토대를 만드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애써주시며, 민화협을 이끌어주신 역대 의장님들 그리고 이종걸 대표상임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들 12기 임원진과 회원님들, 유관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크고 의미 있는 활동을 기대합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



생태공동체로서의 남북한 기후대응 협력방안, 자연기반해법(NbS)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라선
철새보호구 북한은 2018년 습지에
대한 국제환경협약인 람사르 협약의
제17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면서
함경북도 라선철새보호구와
문덕철새보호구를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람사르협약 홈페이지)

지구촌의 기후가 심상치 않다. 2022년은 발생 가능한 갖가지 기후 위기를 경험한 해이다. 히말라야 빙하의 해빙과 파키스탄 홍수, 유럽의 여름철 폭염과 최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겨울철 한파 등 여러 극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간 협의체'인 IPCC는 온난화와 더불어 가뭄, 강우, 강설, 열대성 저기압과 같은 기상현상이 앞으로 보다 극한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북한에서도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홍수와 가뭄 외에도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열대야와 폭염, 태풍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식량과 에너지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북한에서는 자연재해를 완충해주는 산림이나 습지와 같은 자연환경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의 공동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있어 자연에 기반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와 국제사회의 논의 그리고 생태공동체인 남북이 추진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한반도의 기후변화, 남북 공동의 과제

한반도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080년대 12.2℃이던 평균기온은 2010년도에는 13.1℃로 올랐고,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계절 변동을 겪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전평년(1981~2010)에서 신평년(1991~2020)의 평균기온은 남한이 0.3℃, 북한은 0.4℃ 증가하였으며, 최고 기온은 남한 0.2℃, 북한 0.4℃ 증가하였는데, 북한의 온난화는 남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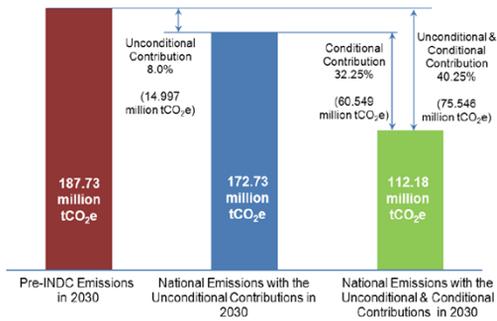
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수량의 경우 남한은 -1.4mm, 북한은 -7.7mm가 감소하여 온난화 현상뿐 아니라 물 공급이 특히 중요한 농업과 같이 부문을 중심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기후변화는 갖가지 리스크를 초래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열 스트레스와 물 부족, 홍수와 태풍 피해, 해수면 상승, 토지의 황폐화, 생물들의 멸종과 같은 문제는 북한의 생태계를 더욱 취약하게 하고 결국 식량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 서로 인접한 남북 어느 한곳에서라도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유사한 생태계를 가진 남북은 서로 협력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남북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북한의 대응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였다. 북한은 1994년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 그리고 2016년 파리협정에도 비준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 위주의 감축의무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라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도래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면서 2050년까지 Net Zero라는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을 비롯하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 그리고 기후행동에 필요한 지원과 기후재원의 조성 등에 합의하였다.¹

이에 북한도 2016년 제1차 NDC를 제출하였고, 2019년에는 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담긴 제2차 NDC를 제출하였다. 북한은 비록 적극적인이지는 않지만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활동을 이어왔으며, 최근 이집트에서 개최된 제27차 당사국총회와 제26차 및 제25차 당사국총회 등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 제1차 NDC에서 북한은 2030년 전망 배출치인 187.73백만 톤의 온실가스를 북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8%를,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32.25%를 감축하여 모두 40.25%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다.

북한이 2016년 제출한 제1차 자발적 감축목표



2019년 제출한 제2차 NDC에서 북한은 자체 노력으로 16.4%를,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36%를 추가로 감축하여, 전체 52%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북한의 야심찬 감축 목표는 자체노력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감축방안은 해상 및 육상 풍력발전소를 비롯하여,

농촌지역과 일반 가정 주택 온수공급의 태양광 대체, 고형 폐기물의 퇴비화, 가정의 구형 석탄스토브의 현대식 대체, 바이오가스 사용과 농촌지역 스토브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스토브로의 교체, 농림업과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확대 등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다양한 적응역량 방안과 더불어 농경지 토양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비롯하여 훼손된 산림 복원과 생태계 보존체계 개선 및 자연보존지역 관리체계 개선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적응방안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추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다.

대북제재 하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접근, 자연기반해법

자연기반해법이란, ‘기후변화와 같은 사회의 주요문제 해결책을 자연에서 찾는 접근’으로 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여 자연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협약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흡수원에 대한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을 강조해 왔다. 이는 파리협정에도 반영되어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의 중요성에 주목하였고,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라스고 기후합의에서도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해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으로서의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였다.

자연기반해법은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

1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은 전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1.5°C 이하 유지 및 2°C 넘지 않는 온도에 대한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하는 목표를 가진다.

할뿐 아니라 자연재해를 완화시켜주어 매년 자연재해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 북한의 경우 건강한 생태계를 통해 자연재해를 완충하는 것은 자연재해 피해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특히 현재와 같이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할 수 있는 소프트한 접근 법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흡수와 자연재해 완충뿐 아니라 산림생태계 복원과 농업생산성 증진이 시급한 북한의 주민생계 개선과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시너지도 도모될 수 있다.

에 따라 2018년 습지에 대한 환경협약인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를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한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산림생태계와 이탄습지, 연안습지, 하천습지와 같은 습지, 그리고 농경지, 초지, 도시 생태계와 같은 공간에서 자연에 기반한 온실가스 흡수와 저장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극복을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다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가능한 자연기반해법 사례

생태계 유형	자연기반해법
산림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 보호 • 재조림과 신규조림 • 사면 녹화 등 훼손 산지 복원 • 농림업(agroforestry) 적용
습지 및 하천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습지 및 하천 보호 • 이탄습지 보존 및 복원 • 하천변 조림 • 유역 생태복원
연안 및 해양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 사구 안정화 및 복원 • 연안습지 보호 및 훼손 연안습지 복원 • 갯벌 및 염습지 보호 및 복원
농업 및 초지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지/방목지 보호 및 훼손 초지 복원 • 재생농업 적용 • 농업 생태계 보존과 농업 토양 관리 (침식 방지 등)
도시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숲 및 가로수 등 녹지 공간 조성 • 옥상 녹화, 텃밭 조성 • 도시 습지와 수공간 조성

북한도 생태계 보호와 복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평양선언에서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협력이 우선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또, 북한은 습지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명수정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2007~)하며 기후변화와 국토·환경 관리, 그리고 남북 및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북한의 흡수와 가뭄, 생태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남북환경협력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 정책자문과 대한적십자사 자문위원, 유엔기후변화협약 정부 자문단 및 민주평통 상임위원 등을 수임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남북 산림협력방안

최형순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과장

2007년 4월 민화협이 주도하여 평양에서 열린 6·15통일양묘장 준공식 및 남북공동나무심기 행사.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정세는 밝지 않고, 당분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간접적인 통로가 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전쟁과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접근과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남북 정세를 분석하고, 전망 및 예측하는 연구자로서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간접적인 관계 개선이나 정보의 획득이 더 힘든 상황이다.

정세와 무관하게, 남북 공동의 적이 있다. 바로 '기후변화'이다. 요즘은 기후변화보다 '기후위기'라고 표현한다. '변화'라는 단어로는 경각심이 덜 느껴진다고 생각되었는지, 이제 '위기'로 널리 말하고 있다. 남한도 북한도 기후위기라는 자연적 현상 앞에는 이념, 정치, 경제에 무관하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북한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재난역학연구센터(CRED)의 2018년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중의 하나이다. 최근 5년 정도의 재해기록을 보면 북한의 홍수, 산사태, 가뭄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6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평안남북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사망 600여 명, 이재민 60만 명의 인명피해와 주택과 건물 3만여 채, 철도 및 도로가 파괴되었다. 2020년에도 집중호우와 태풍(마이삭)으로 인해 황해남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에 사망 22명, 농지 4만 정보, 주택 및 공공건물 다수가 피해를 입을 정도로 북한 역시 기후위기에 의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다.

남북 모두의 고민이자 과제, 기후변화 대응

남한과 북한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적 목표를 UN에 제출하였다. 남한은 2018년 배출량 기준 약 727.6백만 톤을 2030년까지 436.6백만 톤으로 감축(40%)하겠다고 국제사회에 목표를 제출하였으며, 북한은 2030년 BAU(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218백만 톤) 기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단, 북한은 자발적 목표(약 35.8백만 톤, 16.4%)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전제로 한 상향 목표(114.6백만 톤, 52.4%)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이 문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복구전투', 즉 조림과 황폐지 복원을 주요 수단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 간 가장 먼저 협상의제가 된 부문이 바로 '산림'이다. 남과 북은 2018년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림병해충 방지 공동대응 등 남북산림 협력 의제를 합의하였다. 산림은 정치, 인권, 경제 등의 주요 이슈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작은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정무적 이슈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 정부가 편하게 접근하고 협조할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라는 유사한 생태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적·환경적 인식의 격차가 거의 없다. 남한은 1970년대부터 시작한 산림녹화사업을 통해 조림과 복원에 탁월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산림 분야의 당국 간 협력은 현재 정세 악화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 정세에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도움과 수용이 아닌, 양 정부 간 서로가 함께 노력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의제 혹은 사업이다. 특히 한반도 생태계를 보전·복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남북 모두 수용성이 높은

협력 의제가 필요하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협약 UNFCCC 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그동안 미해결로 남아있던 파리협약 6조, 즉 탄소 시장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로써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획득한 배출권의 국가 간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협력사업이 배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북이 협력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REDD+ 사업이다. REDD+(Reducion Emmisiona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도국에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일컫는다. 산림파괴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림을 유지 및 증진해 탄소흡수량을 늘리는 활동을 의미하며, ▲산림전용방지 ▲산림 황폐화 방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 탄소 축적증진의 5개 활동으로 분류된다. 이미 전 세계에서 17개국이 REDD+ 사업 결과 약 110억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국가와 기업이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이행에 활용 가능하다.

남한의 노하우, 북한의 의지 결합하면 성과 가능해

2021년 파리협약 6조의 타결로 인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북한과의 REDD+ 협력사업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현재 북한의 온전한 산림지역의 전용을 최대한 막고, 훼손된 산림을 복원·복구하는 것을 지원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서로 배분한다는 가정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위성영상 등을 이용하여 파악한 북한의 산림면적(2018년 기준)은 약 906만 ha(1ha는 10,000㎡, 또는 3,000평)이고, 이 중 황폐지는 262만ha, 입목지(비황폐지)는 644만ha이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REDD+ 사업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비황폐화된 산림지는 전용방지사업(RED)으로 최대한 보전하고, 황폐지는 조림사업을 통해 복구한다. 두 사업의 완료 혹은 성공 여부의 정도는 100%(완전한 전용방지와 모든 황폐지 복구 가정)와 40%(REDD+ 사업의 국제적 평균 실적)로 가정하여 수행된다. 발생한 탄소감축 실적을 양 정부 간 1:1로 배분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분석한 결과, REDD+ 사업을 통해 남한은 국가감축목표(NDC)의 11.5~27.8%, 북한은 국가감축목표의 29.2~70.5%를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밝힌 남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수치이다.

REDD+ 사업을 통한 남북한(각각 상, 하) 국가감축목표 기여율 (국립산림과학원 분석)

구분	기준년도 (2018)	2030년	누적 기여율
총 온실가스 배출량	727.6	436.6	△291(△40%)
국외감축		33.5	△11.5%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1 (최대)	80.8	27.8%
	시나리오2	33.6	11.5%

구분	BAU (2030)	2030년	누적 기여율
총 온실가스 배출량	218	182.2	△35.8 (△16.4%)
(조건부 목표) 총 온실가스 배출량		139.2	△78.8(△36%)
(최대 목표) 총 온실가스 배출량		103.4	△114.6 (△52.4%)
감축 잠재량	시나리오1	80.8	70.5%
	시나리오2	33.6	29.2%



함경남도 여러 지역에서 폭우에 의한 피해 발생

지난 2021년 8월 북한 함경남도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면서 주민 5천 명이 긴급 대피하고 주택 1천170여 호가 침수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이달 1~3일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1만6천 900여 미터와 다리 여러 곳이 파괴되고, 강·하천 제방 8천100여 미터도 수해를 입었다. ©연합

물론, 이 REDD+ 사업을 하기 위해 몇 가지 선결 사항이 필요하다. 먼저 남북 간 상호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기존 합의된 남북협력 의제였던 산림재해 공동대응, 양묘장 현대화 등의 사업들이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REDD+ 사업을 위한 이른바 4대 참여조건(국가전략, 배출기준선,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장치) 등이 충족되어야 하며, 양국이 참여하는 협의체 설립, 능력배양과 기술협력, 모니터링-측정-보고(MRV) 체계 확립 등, 정치적·기술적 당면과제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국제적 정세의 동향과 향방은 더욱 어려운 장애물이다.

어려움도 있지만, 남과 북은 자연생태와 환경, 언어 문제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남한(산림청)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준비가 되어있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REDD+ 사업의 효용성은 효율적인 북한 산림 황폐화 방지, 기후위기 대응과 실질적 탄

소 감축, 국가감축 목표 기여, 남북협력 및 평화분위기 조성 기여 등으로 수용성 높은 의제라 여겨진다. 지난 12월 7일 ‘지속가능한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는 남북이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필수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상호 간의 직접적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엔기구나 혹은 기타 국제기구 등을 활용하여 북한을 이러한 인도적·비정치적 사업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협력 모드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형순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연구사(2005.5~2015.12), 임업연구관(2016.1~2021.7)을 거쳐 현재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국제협력 및 남북산림협력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성과로는 <북북산림용어비교집>(2021.12. 공저), <기후위기와 남북산림협력: 북한 REDD+ 사업의 효과>(2022.1), <Understanding the agroforestry of North Korea>(2021.10) 등이 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



북한 농업의 이상기후 대응과 협력과제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2022년 5월 북한 평안남도 강서군의
농민들이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 경제와 농업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즉, '개혁 부진과 자본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동기 유발에 취약한 집단농업 체제를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했으며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신기술을 공급하는 데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북한 농업이 봉착해 있는 자본 부족 문제가 투입재의 충분한 공급과 현대적 생산기술의 보급 실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 침체 기간에 농업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낙후되었고, 식량난이 심했던 기간에는 산림이 광범위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따라 기상재해가 일상화고 농업 생산성도 낮아지게 되었다. 최근 들어 북한이 기후변화와 기상재해를 경감시키려는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그에 대응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한반도 기후변화의 양상은 여러 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연평균 기온은 뚜렷하게 상승했다. 여름철 강수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강수 시기의 불안정과 지역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상 기후 발생 양상도 미세하게 달라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 그리고 그 지속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가뭄의 경우에는 겨울철과 봄철 가뭄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거나 강해지는 경향을 띠고 있다.

북한 농업생산에 영향 준 기상재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발생하는 이상기후 피해는 북한지역에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산림 황폐와 인프라 부족으로 기상재해 대응에 취약해졌

기 때문이다. 독일의 비정부 환경단체 '저먼워치 <German Watch>'는 '국제 기후 위험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기상재해 발생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에서 잘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수반되는 홍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며 가뭄과 같은 기상재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15년 동안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20년의 기상재해는 북한 농업생산에 많은 피해를 입혔다.

북한의 주요 기상재해 (2007~2020년)

2007년	전국, 홍수와 태풍(나리), 사망 실종 600명, 이재민 90만 명, 경지피해 22만ha
2010년	전국, 홍수와 태풍(곤파스), 사망 14명, 이재민 12만 명
2011년	전국, 홍수와 태풍(무이파, 메아리), 사망 68명, 이재민 3만 명
2012년	전국, 평안남북도, 홍수와 태풍(볼라벤), 사망 231명, 이재민 21만 명, 경지 10만ha
2013년	평안남북도, 자강도, 홍수, 사망 189명, 이재민 4만9,000명, 경지 13,000ha
2014년	전국, 2014년 3월부터 18개월 동안 가뭄, 식량생산 감소, 18만 명 영향
2015년	황해남도와 함경남북도, 홍수와 태풍(고니), 사망 61명, 이재민 25,500명 (2년간 황해남북도 논면적 58~80% 피해)
2016년	평안북도, 함경북도, 홍수와 태풍(라이언록), 사망 670명, 이재민 14만 명, 27,000ha
2017년	서부 평야지대, 가뭄, 생산 감소, 110만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초래, 5만ha
2018년	황해남북도, 이상고온, 홍수와 태풍(솔릭), 사망 151명, 이재민 10,700명, 9,900ha
2019년	서부 곡창지대, 태풍(링링), 사망 5명, 이재민 6,300명, 46,000ha
2020년	서부 곡창지대, 기록적 강우, 4차례 태풍 상륙, 2007년에 준하는 피해 발생

(자료)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변화에 의한 북한의 자연재해 현황, 2019 UN OCHA,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2020, April 2020. UCSB Climate Hazards Center, GEOGALM Special report, 2020.

북한 'SDG 목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변화와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은 다양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북한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2016년 '제1차 온실가스 저감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을 '국가조립전략(2015~44년)', '국가환경보호전략(2019~30년)', '국가재해경감전략(2019~30년)'에 반영했으며 그 외에 다른 부문별 전략과 국가경제계획에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과제, 사전 경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적·제도적 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30년을 겨냥한 북한의 '국가 SDG 목표'에는 북한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과 계획도 담겨있다. 조립과 수자원 보호,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재해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 하고 있다. 기상과 재난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높이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우선 전국적으로 통합된 통계체계를 수립하고 강화해 나간다는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적절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처리체계 구축, 국제표준지표와 방법론의 도입, SDG 이행 경과를 파악하는 M&E체계 구축과 주기적 검토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의지와 계획은 정책 실행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 보고서(VNR, 2021.6)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 추진의 어려움과 장애 요소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상 관측 수단의 현대화(예방) ▲관련 통계역량 개선과 전국적

으로 통합된 통계체계 구축 ▲국가재해위험경감전략(2019~2030년)의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 ▲산림 황폐화 저감.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정책의 실행 등이다.

북한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스스로의 물적·기술적 역량이 충분하지 않아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와 보건위기에 따른 봉쇄로 필요한 국제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현실도 함께 토로하고 있다.

재해성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북한의 농정

재해성 이상기후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가뭄, 폭우, 폭풍, 폭염 등 이전에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가 갑자기 닥치면 경험 많은 농업인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농산물 작황에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응한 북한의 농업정책에 관해서는 2021년 9월 조선노동당 회의의 김정은 시정연설문(2021.9.21.)에서 그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대응 농업정책에서 핵심적인 농정시책을 들면 다음과 같다. ▲작물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 시기 조절, 선진 영농기술과 방법 적용(기술) ▲우량종자 개발, 토양의 비옥도 개선과 산성도 개량, 홍수에 따른 토양 유실 방지 ▲과학적 물관리체계 수립, 관개 구조물과 설비·저수지·물길의 정비·보강(기반) 등이다.

이들 대응 농정시책 방안들의 실행을 위해서는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농업에서 이들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실행에는 북한 당국의 의지와 계획 못지않게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 여부가 중요하다. 한편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정책도 있다.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 시기의 조절’은 단기적인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으로서 부적절해 보인다. 언제 발생할지, 또 어느 수준으로 발생할지 예견할 수 없는 돌발성 이상기후에 대비해 작목과 품종을 바꾸거나 관행적 파종기를 달리해 식재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 시기의 조절은 단기보다는 중장기 기후변화의 적응 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협력 방향과 주요 과제

최근 들어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과 국제협력 수요에 대해 밝혀왔다. 그 협력 수요들은 종자의 육종과 개량(특히 이모작 확대를 위한 맥류 종자 개량과 공급), 작물 품종의 재배치와 파종 시기 조절, 선진 영농기술 연구와 첨단 경작기법 도입, 농업정보체계 구축, 과학적 물 관리체계 수립, 관개 설비·저수지·물길·구조물의 정비와 확충, 산림녹화를 통한 홍수 방지, 기상 관측수단 현대화 등으로 집약된다.

이들 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력과제를 구분해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기후와 관련된 농업협력과제를 ‘기후변화 적응형’과 ‘이상기후 피해 완화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형 협력과제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등 중장기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

는 작물의 재배 적지 이동, 새로운 기후적응 품종의 개발, 작물의 재배기법 및 가축 사양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와 교류가 포함될 수 있고, 기상과 농업 관련 통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교류도 적합한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상기후 피해 완화형 협력과제는 변화무쌍하게 발생하는 이상기후를 관측·예방하거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농산물의 작황을 개선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기상관측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측 정보 교류와 관측수단 현대화 협력이 필요하고 재해를 현실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시설 복구 협력과 산림녹화 협력이 필요하다.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으로서 농업 투입재 지원, 생산기술 협력, 이모작 확대를 위한 맥류 종자 공급, 씨감자 생산체계 및 농자재 지원도 중요하다. 🌧️

김영훈은 1998년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2022년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재직하며 북한농업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차례 북한을 방문해 협력사업 주체와 정부에 필요한 자문을 했다.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2014~2017)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남북협력분과위원회 위원장(2019~2021)을 역임했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2020~)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2013~)을 수임하고 있다. 최근 주요 연구로 ‘남북한 경험 재개 국면의 농업교류협력 구상과 추진 방안(KREI, 2019)’과 ‘북한의 농림축산물 교역 동향 분석과 전망(KREI, 2018)’이 있다.

민족화해와 협력의 정신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한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와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정치, 북한 문제 전문가라는 점. 그리고 학계에 있으면서도 민화협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한 실천형 학자라는 점이다. 또 공교롭게도 두 학자는 2023년 각각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북한연구학회장을 맡게 되었다. 민화협 창립 25주년이 되는 2023년 두 회장(!)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이야기들을 물었다. 인터뷰는 각각 서면과 추가 인터뷰로 진행했다.

대담 **박인휘**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
정리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사진 **김도형** 객원작가

Q. 올해 제67대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제27대 북한연구학회장을 맡게 되었다.

박 “1956년 설립된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학술단체의 하나로서, 국제정치, 국제안보, 외교정책, 남북관계 등을 연구하는 국내 대다수 연구자들이 소속된 매우 권위 있는 학회다.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만큼 책임감과 부담 또한 크다. 특히 2023년은 한국 현대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두 개의 핵심 사건인, 한국전쟁 정전협정과 한미동맹 체결이 모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러한 문제를 학술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과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시기에 회장을 맡게 되어, 학회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연구학회의 최우선 활동 목표는 ‘북한 연구의 가치 제고’에 두고 있다.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정보로서 북한 연구의 가치를

발굴하고, 회원 간의 느슨한 연대를 통해 확장성을 높이고, 북한 연구의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현안 문제가 나올 때 대응하는 추격형 연구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선도형 연구를 지향하고자 한다.”

Q.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에서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안정화와 함께 한중, 한일, 한러 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쉽지 않은 시기 우리 정부의 외교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박 “모든 국가는 저마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 정체성은 국제정치학에서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의 하나였다. 저는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정체성으로 ‘국제성’을 꼽고자 한다.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 한반도는 국제질서의 변동에 크게 영향받아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금의 국제질서는 그야말로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소용돌이

전영선 북한연구학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장 박인휘



의 한 가운데에 있다. 미중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축되는 강대국 정치의 귀환이 전개되고 있고, 강대국 약소국 할 것 없이 모두 국가 이기주의에 몰두해 있다. 국제성이 강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외교안보환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과 같이 국제성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역량으로 전환시킨 사례도 많다. 이런 사례들을 교훈 삼아 함께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과 지혜를 모아 한국 외교의 좌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Q.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어떠한 대화 제안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 군사적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고조되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남북관계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 “남북문제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주변국의 관심과 협력은 우리 주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문제에 대한 주도적 입장에서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 해결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 바탕에서 북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연구는 전략자산이자 국정 운영의 기본 정보다. 학술적인 연구를 베이스로 한 상황 판단과 적실한 정책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색과 어지러운 국제정세 속 생존의 길은

Q. 미중 갈등 장기화 속에서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양자 택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많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의 슬기로운 조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박 “미국 및 중국 모두와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다만 우리의 경우 북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렵고, 앞서 얘기한 독특한 국가 정체성으로 인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특수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이다. 대체로 지난 모든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종의 균형외교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의식 자체는 옳았지만, 한편으로 균형외교는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설정이 아니었나 싶다.

결국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과 중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국가이익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원칙으로 삼되, 사안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미중 사이에서 거리의 균형이 아닌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Q. 여전히 척박하지만 그동안 국내 북한학 연구는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뤄왔다. 현재 국내 북한학 연구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전 “북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정치, 경제, 군사 분야는 물론 사회, 생활, 문화, 과학 분야에서 양적 확장과 질적 심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은 정체된 것이 아닌가 한다. 코로나로 인해 북한 자료가 들어오지 않고,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급감하였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북포자'(북한 연구 포기자), '탈북학자'(북한 연구를 그만두는 학자)가 늘어난 것도 이유다. 선행 연구가 후속 연구로 이어지지 못하고, 얕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 자료 공개가 논의되고 있는데, 북한 정보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공공 연구를 통한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민간 통일운동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 미쳐야

Q. 오랫동안 민화협 정책위원, <민족화해> 편집기획위원 등을 맡으며 민화협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현재 민간통일운동 단체들은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간 통일운동에 참여하며 느낀 소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박 “민화협과의 인연이 언 10년이 다 되어 간다. 부족한 제가 남북한 민족화해라는 엄숙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 점은 매우 영광스러운 경험이었다. 민화협은 이념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한반도 통일과 민족화해를 희망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참여가 가능한 매우 열린 공간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설립 당시의 취지가 다소 퇴색된 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민화협마저 순수한 민족화해 정신을 간직하지 않는다면, 민간 통일운동의 에너지는 더욱 축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전히 민화협에 계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꾸준히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계신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학계, 언론

계, 문화계 등 다양한 시민사회 전문가분들과의 교감을 더욱 넓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 “민화협은 정책위원으로 시작하여, 오래 활동했다. 남북관계가 정체되면서, 시민단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이 문제가 남북관계가 시민단체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본다. 남북관계가 시민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동력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꾸준히 활동하게 만드는 가치와 동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근원적으로 시민단체란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하는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Q. 남북사회문화의 이질성을 인정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전 “저는 북한 연구를 한 마디로 ‘북한 위에 덧씌워진 모자이크를 벗기고, 실사에 다가가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은 분단 이래로 ‘그 자체로 북한’이었던 적은 없었다. 우리의 시선에 놓인 북한으로 보았다. 그러다 보니, 남과 북은 늘 비교 대상이었다. 하지만 저는 북한이 놓인 지형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은 정권의 북한이 이전의 정권과 다른 것은 정권이 바뀌어서 달라진 것이 아니다. 북한이 놓인 지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책이 달라진 것이다. 가장 큰 차이는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세계사적 냉전 구조가 해체된 지형 위에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있는 자원과 기술로 생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남북 문화의 이질성을 인정하는 것은 생각

보다 어렵다.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폭력적인 접근이다. 우리 편은 같아야 한다는 분단 사유의 발현이라고 본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뿌리 깊은 인식을 돌아보아야 한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로 귀중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Q. 2023년 민화협은 창립 25주년을 맞이한다. 민족화해와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민화협에 격려와 연대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박 “얼마 전 읽은 시인데 이런 구절이 있었다. ‘시인은 펜이 젤로 무겁고, 건달은 빈 등이 젤로 무겁다. 경이롭잖은가. 저마다 가장 무거운 걸 제로 잘 휘두르니.’ 어느덧 25년의 역사를 쌓은 민화협에게 민족화해와 통일운동은 젤로 무거운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믿는다. 그 무거운 과제를 민화협이야말로 가장 잘 이겨낼 것이라는 점을 굳게 믿는다. 만델라 대통령의 구호다. 민화협 우분투!(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전 “민화협의 창립 정신은 ‘화해와 협력’에 있다. 서로의 가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열린 마음이 민화협의 정신이자, 동력이다. 흔들림도 있었지만 민화협의 정신을 지키려는 노력이 25년의 역사를 만들었다. 민화협의 정신이 반드시 화해와 협력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

2023년
한반도 전망과
과제

북한 의도와 대내외 정세 판단에 대한 치밀한 분석 바탕으로 과감한 행동 필요해

이른바 '대전환'이라 표현할 만큼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움직인 한 해였다. 2022년은 국제정세의 대전환 속에 남북관계의 첨예한 갈등과 대결이 이어진 해로 기억될 듯하다. 그렇다면 2023년 새해는 다시 남북의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 회복을 통한 관계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가. <민족화해>는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찾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큰 욕심보다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했다. 대담은 12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진행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정리 **김도희**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재단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대담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박종철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정대진
원주한라대학교
교수



조진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Q 복잡다단했던 2022년이 저물어간다. 남북관계와 주변 정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김상기 | “남북관계, 국제관계 모두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이 심화된 한 해였다. 남북관계는 북핵·미사일 고도화, 한미연합훈련 강화, 미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 국제정세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됐다. 특히 최근엔 첨단 기술 영역에서도 양국이 경쟁하는 등 그 폭이 넓어졌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경쟁 구도에 미리 대립까지 더해졌다. 국제관계에서 비전통적 안보 위협으로 인식되는 보건 문제, 기후위기 등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한 이슈들이 상당한데, 협력보다 각자도생이 더 확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조진구 I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국방비가 계속 늘어나는 데 주목한다. 자국의 안보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국방비 비중이 달라지는 법인데, 우리 주변 국가들이 안보 환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 군비 경쟁 국면으로 이어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일동맹에 의존해왔던 일본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폭 증가하는 일본의 방위비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일본의 방위력 강화가 주변국을 자극하지는 않을지가 핵심이다. 그것이 한일관계나 남북관계 뿐 아니라 역내 정세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정대진 I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어쩔 수 없이 폐쇄적인 현상 유지 상황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반도 질서와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만이 유일하게 현상 전환 세력으로서 역할을 하려 했다. 지금은 정권이 바뀌어 한국도 폐쇄적 현상 유지 세력에 가까운 대북 정책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 유지 기조가 2022년을 기준으로 더 심해질 것 같고, 신냉전에 가까운 기류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박종철 I “2021년 10월 중러 연합 해군 함대가 역사상 최초로 ‘해상연합 2021 훈련’의 일환으로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해 일본열도를 일주하는 군사 훈련을 하였다.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양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라고 밝혔다. 2017년만 하더라도 북핵 문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적대시하는 발언이 많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또 지난 G20 회의를 보면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국경에서 무력 충돌 중인 인도의 모디 총리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인도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인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등 전통적 동맹외교를 넘어서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각자도생의 시대, 생존 해법은 무엇인가

Q 2022년 남북관계는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 새 정부 출범 첫째 대북정책을 평가한다면.

김상기 I “남북관계는 올해 초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다. 북한은 3월 24일 ICBM을 발사하며 핵-ICBM 모라토리엄을 폐기했다. 최근까지 ICBM, IRBM,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무기 시험을 30여 차례 이상 실행했다.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전술핵 운용부대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억지력 강화로 맞대응해 강대강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강화, 한·미·일 연합훈련, 미 항공모함,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적극 추진이 그 예다.

특히 한미 연합 공중훈련 기간에 남북은 NLL 이남, 이북으로 미사일을 주고받았고, 11월 18일 북한 화성 17형 시험 발사 직후 미 전략폭격기가 한

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등 자칫하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남북대립과 불신은 더 심화되고, 우발적, 국지적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 완화, 충돌 방지 방안 모색이다.”

Q 현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이 남북 중 누구 때문인지, 이른바 ‘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정대진 | “속도, 시간, 방향의 세 가지를 봐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방향으로 잡았다. 속도와 시간이 문제다. 핵·미사일 고도화에 필요한 속도와 시간을 조절해 긴장이 덜 고조되게 하냐, 아니냐의 문제만 있다고 본다. 우리는 정권 성향이 어찌 됐든 방향은 늘 ‘선 평화 후 통일’이다. 다만 속도와 시간이 정권에 따라 많이 바뀐다.

윤석열 정부는 빠른 속도로 북을 압박하는 것 같다. 여기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선 비핵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담대한 구상을 보면 알 수 있다. 비핵화 대화에만 나오더라도 북한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비핵화 허들이 낮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선 비핵화’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은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 이미 완성형이다. 현실적으로 비핵화보다 동결이나 확산 방지가 더 실현 가능한 정책 목표가 아닐까 싶다. ‘선 비핵화’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국제관계 보편성에 지나치게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는 남북 간 특수성과 국제관계 보편성이 균형을 맞춰야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윤 정부는 경도됐다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국제관계의 보편적 가치만 고집한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남북이 이러한 특수관계에 있으니 어떤 방법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 국제관계의 일반 원칙, 기준에 대해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로는 북한을 설득하기 어렵다. 핵 포기 선언이 아니면 상종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국제사회 보편성을 지키라고 요구해봤자 북한은 호응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북한? 변해야 하는 남한?

Q 제20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력하게 확립되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여기에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더욱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럴 여력과 의지가 중국에 있을까.

박종철 |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추가 반입되고 있는 여러 첨단군사 장비들이 북핵에 대응하기보다 중국 및 러시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북한을 명분으로 삼는다고 본다. 북핵이 있어야 미국이나 일본이 한반도에서 동아시아 문제, 특히 중국에 간섭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더불어 중국은 북한 핵실험을 윤석열 정부, 기시다 내각, 바이든 정부가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본다.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대결이 심화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일부 중국 학자들은 ‘북핵 문제가 안 풀리는 건 한·미·일의 보수세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북핵

문제를 푸는 지렛대를 보수세력이 제거했다고 판단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폐쇄해 버렸고, 북일 무역도 거의 없다. 미국은 자국민의 북한 입국조차 금지한 상태다. 한·미·일 보수세력은 제재로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끊어놓고 해법이 나오지 않자 중국에게 북한 설득을 의뢰하는 셈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미·일 연대는 북핵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진구 I “북핵 핵무장은 한·미·일 보수세력의 작품’이라는 중국 측 견해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저는 현 상태에서 윤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5년을 성찰하고 교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왜 2018년의 훈풍을 2019년 하노이 이후에도 이어가지 못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문제는 한반도의 구성원인 우리가 중심이 돼 풀어나가야 한다’는 역할론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말에 걸맞은 행동을 했는가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다. 현재 정부가 이러한 성찰 위에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여지를 찾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북한 핵실험이 한·미·일 정부의 정권 지지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중국 측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긴 어렵다. 너무 정치적인 눈으로 북핵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다. 오히려 ‘자신들의 핵실험을 통해 상대방이 떨어진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북한이 핵실험 속도를 늦추거나,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하지 않을까. 북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본다.”

Q 그렇다면 중국은 더이상 자신들이 북핵 문제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인가.

박종철 I “냉전 시기 증소는 북한에 자국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경제제재, 군사제재를 가했다. 그래도 소국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렇다.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과 친중파를 숙청하고, 연이은 핵실험과 무력시위를 할 때,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발동하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있다. 북핵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김정은 정권을 통제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과거와 같이 앞으로도 간섭을 하면 오히려 반발을 하여 통제 밖으로 튕겨져 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잠정적인 핵 동결을 차선이라고 판단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 긴장이 심화되면서, 북중 관계는 역사상 최상의 단계에 도달했다. 진영구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비핵화 압력을 넣었다가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과도 결별하며 더욱 새로운 길을 갈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김상기 I “과거 중국에게 북한이 자산보다는 부채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면 지금은 자산의 의미가 더 크다.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중국에게 북한은 유리한 카드다. 과거 중국이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했지만 현재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이 힌트가 되겠다.”

누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가

Q 현 정부는 출범 이후 한일관계 개선에 큰 의지를 보이며 적극 노력해 왔다. 오랫동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일관계 개선의 여지는 있을까.

조진구 I “현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떤 계획과 시간표를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과와 기금 출연 여부가 관건이다. 우리 정부의 노력에 상응하는 일본 측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평가하나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은 듯하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역량이나 전략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일본은 방위비를 5년 이내에 GDP 대비 2%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반격 능력’이라고 이름 바꿔 사거리 1000 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양산해 배치하고 외국제 미사일을 도입해 스탠드오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간접 배치하는 모양이 된다. 당연히 북중은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한·미·일 협력이 강화될수록 북중관계는 긴밀해져 대립 구도가 강화된다.

대북, 대중 외교가 어려운 문제로 꼬일 수 있다. 정부가 일본과 동맹까지 가지 않는 협력 관계를 구상하는 것인지, 준하는 관계를 피하는 것인지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Q 북한은 장기간의 국제제재,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봉쇄, 북미 및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초래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의 내구성을 바탕으로 생존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그 내구성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김상기 I “미중 경쟁, 미러 대립 심화 상황은 북중, 북러 협력 강화로 이어진다. 이는 북한 입장에서 핵·미사일 고도화와 경제성장 병진을 돕는 기회다. 북한은 최근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극세계로부터 다극세계로의 전환’이라고 말했고, 그러한 변화를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직접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도 중러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거론됐다.

중러도 북핵·미사일 고도화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며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에서도 중러는 추가적인 대북제재 결의안이 올라올 때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에 대한 규탄 성명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령이 아직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북중, 북러 간 화물열차 운행이 다시 시작됐다. 국경 봉쇄령이 해제되면 북중, 북러 교류는 확대될 것이다. 북한이 다른 곳에서 경제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면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할 실리적 동기가 축소된다. 우리로서는 북한을 설득할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정대진 I “과거 북한 경제개발은 내부 자원을 쥐어짜 타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였다. 이제 김정은 시대 북한은 기술의 국산화를 강조하고 있

다. 외부와 접촉해 좋은 기술은 받아들이고, 자본주의 국가와도 도움이 된다면 교류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다. 이 구상에 중리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남한이 북한을 유인할 동력이 없어질 수 있다.”

박종철 | “제재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북한 경제의 내구성이 상승했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국가별 자별적 검토(VNR)에서와 같이 연 5%정도 경제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최근 북한에서 출판되는 책들에서 ‘왜 핵·경제 병진 노선이 되어야 하는가’ 논하는 부분에서, 핵과 미사일은 개발 초기에 높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핵무력 완성 이후 유지비용이 적다는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 2018년 당시 핵·경제 병진 노선을 부정하는 발언과는 정반대로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의 길을 가고 있다. 기본 지표인 식량, 휘발유, 환율이 안정적이고, 러시아 석유와 밀가루 가격 하락으로 북한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 북한경제 위기론이나 붕괴론에 기반한 현황 파악과 전략수립을 경계해야 한다.”

부족함은 기억하되, 유연성도 놓치지 말아야

Q 낙관적인 전망이 어려운 2023년이다. 그럼에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필요할까.

조진구 | “당분간 남북관계에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힘들다. 이럴 때 대북정책을 다시 구상하고 정비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것은 굴욕이다’ 같은 정치적 비판을 우려하기보다, 지금이야말로 보수 정권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김상기 |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도 2022년과 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시기를 전후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질 듯한데, 군사적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고민이 절실하다. 북한과 군사-안보 문제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해야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확대를 막을 수 있다.”

정대진 |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남북관계 정상화’는 북한에게 저자세로 보였던 정책을 모두 고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정상화를 쿨하게 봤으면 좋겠다. 같은 평면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유해보자면 우리가 일본이 역사,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 미안하다고 빌어야 한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는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한중대화는 없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유독 남북대화에 대해서만 비핵화에 여러 조건을 다는데,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원칙은 지키되 유연함을 갖추었으면 한다.”

박종철 | “우리가 북한보다 능력이 있으니 제재와 압박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전략은 상황을 악화시킨다. 힘에 의한 평화는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상대가 굴복하지 않고 공멸을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된다. 지금 관계가 나쁘더라도, 장래의 대화, 협력을 고려하여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 다리를 뜯어버리면 다시는 강 건너로 돌아올 수 없다.” 🌊



러시아 지역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

시베리아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

박한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재형은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이자, 독립운동가, 그리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잊혀진 원형이었다. 최재형은 함북 경원의 노비 출신으로서 1860년대 경제적인 이유로 러시아 연해주로 도주하여 1880년대 러시아에 귀화한 뒤, 그 지역의 도헌 및 자산가로 성장하여 재러 한인사회를 이끈 대표적인 지도자였으며,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가장 신망받는 친러 인사였다. 그는 1905년 이후 적극적으로 항일투쟁에 참여하여 1920년 시베리아에 출병한 일본군에게 처형될 때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즉, 1900년대에는 러시아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의병조직인 동의회의 총재로써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민족 언론인 <대동공보>와 <대양보>의 사장으로서 활약했다. 1910년대 초반에는 권업회의 총재, 1919년 3·1운동 이후에는 대한국민회의의 명예회장으로 활약하는 등 1900년대부터 1920년까지 러시아지역에서 조직된 주요 단체의 책임자로 일했다. 그리하여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성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재무총장에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이

처럼 그는 한국독립운동사상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박은식은 그의 저서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최재형에 대하여 다음과 소개했다.

“최재형은 함경도 경원사람으로 9살 때에 러시아의 연추로 옮겨가서 살았다. 사람됨이 침착하고 강인하고 날쌔고 씩씩하여 모험을 감행하였다. 러시아의 글과 실정에 익숙하여 러시아 관원의 신임을 얻었으므로 우리 겨레의 노동자를 위하여 비호한 일이 매우 많았다. 두 번이나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가서 러시아 황제를 뵈고 훈장을 받고, 연추 도헌의 관직을 받으니 연봉이 삼천 원이었다. 이것을 은행에 저축하여 두고 그 이자를 받아 해마다 학생 1명을 러시아의 서울에 보내어 유학하게 하였다. 우리 겨레 학생 중 러시아 유학 출신이 많은 것은 다 그의 힘이었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로 떠돌아다니며 러시아의 국적을 갖기는 하

였으나 조국을 그리워하였으며, 박영효를 만나보기 위하여 일본에 간 일도 있다.

1908년에 이범윤이 거의를 모의하고 최재형을 대장에 추대하니 주러시아공사 이범진이 3만 원을 보내어 자금으로 삼게 하였다. 이에 안중근, 장봉한, 최병준, 강만국, 조항식, 백규삼, 오하영 등이 군무를 분담하여, 그해 7월에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 경원의 신안산에서 싸워 승리하였다. 전진하여 회령의 영산에서 크게 전투를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전하고 로령으로 돌아갔다. 오랜 후에 군사지회의 부회장이 되었으며, 만아들 운학은 러시아군의 장교가 되었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는 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취임하지 않았다. 이듬해 4월 일본병이 러시아의 신당과 싸워 쌍성을 습격 파괴하고 죄 없는 수많은 우리 겨레들을 함부로 체포하였다. 그래서 최재형은 김이직, 황경섭, 엄주필 등과 함께 모두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이처럼 박은식은 최재형의 교육활동과 의병활동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1920년 9월 12일 블라고베스츠크에서 대한국민의회에서 간행한 『자유보』 창간호에 실린 최재형 등의 추도식에 관한 기사에서도, 최재형의 교육가 및 군사가로서의 면모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처럼 최재형은 러시아지역에서 일제에 대항하여 투쟁한 독립운동계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었다.

안중근 의거의 숨은 후원자 최재형

최재형은 구한말부터 일본군에 총살당하는 1920년까지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

개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인물들은 누구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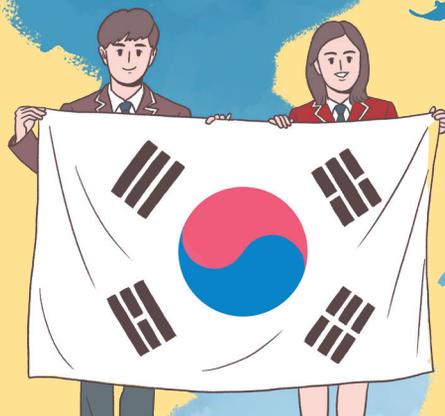
우선 주목할 만한 인물들은 구한말 그와 함께 동의회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이다. 만주·러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의병장들인 이범윤, 홍범도, 안중근 그리고 헤이그 밀사를 주도한 주러 한국 공사 이범진과 그의 아들 이위중 등이다. 특히 안중근은 최재형 휘하에서 1908년 7월 7일 군사부 우영장을 맞아 두만강 연안 신아산 부근의 홍의동을 공격했다. 아울러 동의단지회를 결성하고 하얼빈 의거를 결행하여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윤봉길 의거의 든든한 후원자가 김구였다면, 안중근 의거의 중심인물은 바로 최재형이었던 것이다.

민화협은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최재형 선생의 고손 쇼로코브 알렉산드르(Shorukov Alexander/러시아 플레하노프 경제대학교)와 2022년 역시 최 선생의 고손인 박 엘레나(Pak Yelena/러시아 ITMO 대학)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수여했다. 머나먼 타국 땅에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 뜨거운 피와 땀을 바쳤던 최재형 선생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긴다. 🌸

박환은 서강대학교에서 사학과(문학박사)를 졸업하고 현재는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근현대사, 해외한민사회와 민족운동, 북한사 등을 연구하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위원,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40여 편 이상의 저서도 출간했는데 대표적으로 <만주한인민족운동사 연구(1991)>, <시베리아의 항일운동의 대부 최재형(2009)>, <독립군과 무기(2020)> 등이 있으며, 2022년 9월 <근대민족운동의 재발견> 등이 있다.

이런 세상에서 통일이 가능할까

추재훈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재단



“우리가 북한을 먹여 살려야 하잖아요. 통일은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자주 북한과 통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위와 같습니다.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젊은 층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2022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2020년 44.2%에서 51.7%로 늘었지만,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이 바로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었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통일이 되어도 좋겠으나, 부담이 있단 걸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생긴 ‘통일 비용’ 담론은 아직도 통일 논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유의미한 지적이지만 꼭 맞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독일은 통일 비용을 대부분 서독의 채권 발행, 조세 수취, 재정정책 등을 통해 충당하려 했지만, 한반도에서는 꼭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 이야기가 나오면 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일이 통일하면서 서독이 돈을 많이 썼지만 대

부분 정부의 공공기금이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요. 기업들도 뛰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면 기업도 참여해 통행료 일부를 일정 기간 기업이 받는 식의 민간 투자도 가능해요. 공장도 중국이나 동남아가 아니라 북한 지역에 지을 수 있고, 이북의 공단 입주나 세금 절감을 조건으로 공단이나 인근 거주지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요. 북한은 ‘황금의 땅’이 될 텐데, 우리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마다하겠어요?”

기업 참여를 통한 통일 비용 충당은 빈부격차나 노동권 제약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 비용을 오직 정부와 국민이 부담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잘 활용해야 하는 선택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지점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통일에 관해서 비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어서입니다. ‘사회적 배척’입니다.

2019년 겨울, 서울 은평구에선 많은 주민이 뜻밖의 일을 목전에 두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던 ‘여명학교’가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명

학교는 2004년에 문을 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식 학교로 인가해 졸업 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됩니다.

은평구민이 사용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주민 동의가 없었다”, “쓰레기장 들어오고 탈북학교 들어오는 동네가 좋은 동네냐”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한 주민은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에게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안전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느냐”라고 쓰아붙였고, 은평구의 한 공무원은 “탈북민 자녀들이 다니는 교육시설은 인근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는 진관동 내 시설 부족이었습니다. 진관동은 2000년대 초 ‘은평뉴타운’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했고 여명학교 이전이 계획되던 땅도 편의시설을 위한 용지였는데, 이제와서 계획에도 없던 외부 학교를 들이느냐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양측은 끝내 합의하지 못했고 여명학교 이전은 흐지부지됐습니다. 돈도, 땅도 있지만, 합의 실패로 무산된 겁니다.

이유 없는 갈등은 없고 은평구 주민의 입장도 이해 못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도 학교도 만족하는 합의가 이뤄져 학생들도 상처를 입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여명학교의 이전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도 생겼고요.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땅을 왜 외부 학교에 주느냐.’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서 눈에 띈 것은 ‘외부’라는 단어였습니다. 같은 주민이 될 수 없는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뉘앙스입니다. 별로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은 대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동네에나 양보와 배려가 넘실댄다면 좋겠지만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 먹고살기도 힘든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배척하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2017년 서울 가양동에는 장애아동 특수학교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장애아 부모들이 무릎을 꿇었고, 2018년 제주도에서는 전쟁과 죽음을 피해 온 예멘 난민들이 ‘가짜 난민’, ‘강간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럴진대 통일 과정에, 혹은 통일 후에 북한 주민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떨까요. 탈북 청소년을 향해서도 범죄를 걱정하는 우리가 군인 출신의 함흥 사람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순식간에 실직자가 될 북한 지역의 노동당 당원, 군인, 전문직 종사자들, 남쪽으로 내려와 취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통일 비용에 관해 이야기하다 보면 ‘통일이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그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봐요’라는 말이 입을 댄습니다. 기껏 통일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이라면 ‘좋은 통일’이 어려운 듯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사회적 적대와 갈등을 줄여나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일 외에 다른 모든 사회적 화합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배타심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해결은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세상에서 통일이 가능할까’라는 회의보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믿음일 것입니다. 🌈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반도 정세 전망

북핵 고도화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 만들어야

정구연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미 중간선거 전날인 11월 7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보위 주립대학에서 열린 민주당 지원 유세에 참석,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후보와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

지난 2022년 11월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예외로 민주당이 선전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은 그 추진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하원에서도 근소한 차이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갔기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한반도 접근법은 미국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국 국내정치적 지형과 변화 요인을 짚어보는 것은 향후 한미 간 대외정책 조율에 있어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향후 한반도 전망을 포괄적으로 논의해본다.

정치적 양극화 속 경제문제에 방점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씩 상승세를 타며 40% 중반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30%의 지지율 수준에 머물렀던 상황과 대비되었다. 그러나 중간선거 캠페인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 여부 등과 관련해 공화당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시도들이 존재했고, 심각한 미국 내 정파적 양극화를 반영하듯, 공화당 지지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공화당 후보

가 선거에서 패배한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등장했다. 이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향후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 전후로 공화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급부상한 플로리다의 주지사 론 디샌티스도 인해 공화당 내의 세대교체가 예측되고 있다. 특히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민주당의 공고한 히스패닉 지지층을 분열시킬 수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욱 포용적인 리더십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되었다.

더욱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히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관련 혐의와 1·6 미국 연방 의사당 폭동 사태 선동 의혹은 공화당 내에서도 거부감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미국 하원 의회폭동특위가 12월 말 조사를 마무리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혐의 기소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면 트럼프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 대해 보여준 불신과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을 스스로 언급하며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과는 달리 미국 유권자들은 상대적으로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끌

었던 현안은 바로 경제와 정치적 양극화였다. 특히 5~6%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승과 물가 상승, 그리고 불법 이민자 문제는 공화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이었고, 정치적 양극화, 특히 정파적, 이념적 양극화의 심화, 그리고 낙태법 폐지 이슈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이었다. 요컨대 유권자의 정파성에 따라 투표 우선순위로 설정한 현안은 매우 상이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의회에 대해 갖는 기대 수준도 달랐다. 정치적 양극화의 수준을 보여주듯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46.8%로 상당히 높아졌으나, 동시에 그러한 양극화에 따라 유권자들이 분열되어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당 지지자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기에, 민주·공화 양당은 향후 바이든의 경제정책과 이와 관련한 입법 과정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인데, 고유가와 인플레이션 등의 변수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위한 제조업 투자,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조치들이 남은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미중 경쟁의 맥락에서 필요한 부분은 반도체, 광물 등 핵심 경쟁영역에 대한 공급망 재조정과 Chip 4와 같은 기술 혁신 글로벌 리더십 및 연합

체 구축이다.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인프라 및 R&D 투자와 같은 영역에 좀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화될 중국과의 경쟁에 대비하겠다는 의중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 대중국 견제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관철될 것이다. 비단 경제영역뿐만 아니라 안보, 특히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중국 역할론, 여전히 유효한가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는 있으나,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기에 미북 간 의미 있는 대화도 부재한 상황이다.

미국 내 북한 문제는 외교적 우선순위에 놓여있지 않다. 미중 강대국 경쟁이 우선순위에 놓여있고, 경제, 안보, 기술, 민주주의 등 전방위 영역으로 확장된 미중 경쟁의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은 현안이다. 더욱이 북한과의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미국이 북한 문제에 외교적 자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 억제에 방점을 둔 조치들을 동북아 역내에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통합억제 차원에서 역내 감시정찰자산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 미국 인도태평양 우주군사령부 예비부대로서 주한 미우주군을 창설한 것뿐만 아니라 일본 요코타 기지에 미일정보분석소를 설치한 사례 등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레이더 등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뿐만 아니라 역내 관련 위협을 포괄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억제조치는 최근 강화되어가는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미국 내 양당 모두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조치들이 과연 북중 간 연대를 강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오히려 북중 간 분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현재 동북아 역내 집중되는 감시정찰자산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도발,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각종 미사일 발사 실험과 7차 핵실험 가능성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한 한반도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강화할 것이며, 중국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책무가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북미대화 재개 위한 지혜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은 아직까지 초기적인 구상 단계에 놓여있다. 억제와 단념, 그리고 대화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담대한 구상'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과 같은 맥락에 놓여있다. '담대한 구상'은 경제적 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전략자산의 전개뿐만 아니라 감시정찰자산의 확대를 통한 대북억제조치의 확대,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에 더 높은 도발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중국 견제라는 목표도 분명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점차 가시화되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 및 한국과 단기적으로 대화할 유인이 부재하다. 핵 및 미사일 능력 제고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화하고 대미·대남 레버리지 확보를 위해 도발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정구연은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전쟁 이후 수도 평양의 탄생과 상징공간 조성

- 김일성광장 일대 조성과정을 중심으로 -

민화협은 2019년부터 롯데장학재단과 공동으로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정치, 군사 분야를 제외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주제로 신진학자들의 논문 공모를 통해 이 분야에 대한 학술적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의 동질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민족 화해>는 본 사업에 선정된 우수 논문을 한 편씩 요약하여 소개한다.

김태윤 문학박사·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일성광장은 현재도 평양을 대표하는 상징공간, 중심공간이다. 김정은 정권 시기 평양에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보통강변 아파트 등이 조성되면서 평양의 도시경관은 많이 변했지만, 김일성광장은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매우 유사하다. 열병식이 진행될 때마다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고 각종 매체에 보도자료로 활용되는 김일성광장은 한국 국민이 평양에서 가장 많이 접한 공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북한의 수도 평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김일성광장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김일성광장은 평양 도시건설의 맥락에서 그

조성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해방 이후 평양은 도시 전체의 마스터플랜은 없었지만, 주택지 조성, 보통강 개수 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일제시기에 생겨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들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무색하게 평양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도시의 80%가 파괴되었고 다시 새롭게 건설하고 계획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기존 연구들은 한국전쟁 시기 평양이 폭격으로 완파되고 백지화된 전 도시 위에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투영했다는 결론을 내려왔다. 하지만 사실상 도시라는 공간적 속성은 고정적이기 때문에 ‘완벽

1953년 김일성광장 열병식과 현재의 김일성광장 열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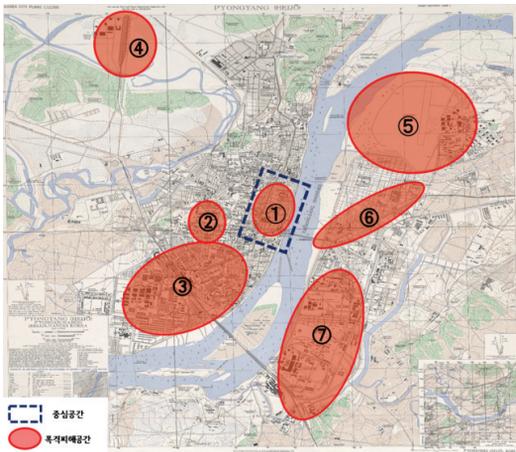


한 청산'이 불가능하다. 도시 공간은 역사가 만드는 여러 이미지들이 쌓이는 저장고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근대도시계획의 결과는 해방 이후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도 다양한 형태의 도시유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도시유산 위에 평양이 한국전쟁 이후 어떠한 과정으로 재건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연구의 출발지점이다.

김일성광장은 언제 어떻게 조성된 것일까?

한국전쟁 이후 인민경제 3개년 계획 기간 중 북한이 가장 집중해 건설을 완료하려 했던 공간은 평양의 중심부 즉 김일성광장과 쓰팔린거리를 중심으로 한 공간이었다. 한국전쟁 시기 평양은 폭격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폭격으로 인한 파괴가 심했던 공간을 지도 위에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전쟁 기간 전방위적으로 미군의 폭격이 이뤄졌지만, 폭격이 심했던 공간 중에서도 공간적 성격을 유지한 공간과 완전히 새롭게 다시 설계된 공간을

한국전쟁 시기 폭격이 이루어진 평양의 도시 공간



참고 : ①김일성광장 승리거리 ②관공서 공공기관 ③평천구역 ④서평양역 철도대학 ⑤동대원구역(주거지·도시화) ⑥대동강구역(주거지·도시화)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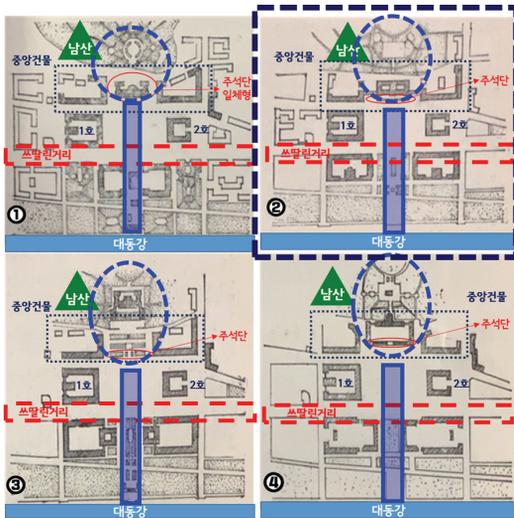
①·⑤·⑥번 지역은 폭격으로 인해 기존의 공간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곳이며 ②·③·④번 지역은 각각 공공기관, 교통시설, 공업시설 등이 밀집해 있던 과거의 공간성을 유지한 공간이다. 김일성광장이 들어선 1번 지역은 평양의 동서를 잇는 대동교가 있으며 일제시기 공공기관들이 밀집되어있던 공간으로 미 공군의 주요 폭격 목표였다. 전후 폐허가 되어버린 이 공간을 북한은 평양과 북한을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1953년에 착공한 평양 중심부 조성공사는 1954년 들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쓰팔린거리는 처음 조성될 시기부터 쓰팔린거리라는 이름 하에 계획이 진행되었다면, 김일성광장은 중앙광장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이 진행되다가 1954년 3월 20일 『조선인민군』 「평양시 복구 재건의 전망」이라는 기사에서 중앙광장을 김일성광장이라고 명명한 이후 광장이 준공될 때까지 중앙광장과 김일성광장이라는 명칭이 혼합되어 사용되었다. 사실 동유럽과 소련의 경우 1940년대부터 국가 지도자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하는 경우는 흔하게 있었다. 소련의 스탈린그라드(Stalingrad)와 레닌그라드(Leningrad),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그라드(Titograd)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인민민주주의 혁명단계에서 김일성 또한 영웅이자 영도자로 형상화되어 김일성의 이름을 딴 '김일성종합대학'이 1946년 개교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소련이나 동유럽에 비해 김일성의 영웅화 작업은 미약하게 진행됐다. 그 이유는 티토의 경우 해방 이전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제1서기장으로 빨치산 부대를 통일적으로 지휘했지만, 김일성은 해방

이전 여러 공산주의·무장투쟁부대 지도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평양이라는 대표적 도시에서도 상징성을 가지는 이 공간은 많은 건축가들이 투입되어 설계를 진행했다. 심사 과정 또한 엄격하게 이뤄졌는데, 북한 도시계획가들에게 중요했던 몇 가지 요소를 언급하자면, 1.대동강과 주석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공간, 2.주석단과 중앙건물의 디자인, 3.뒷산인 남산과의 연결성 등이었다.

김일성광장 현상설계 시안



김일성광장 현상설계 시안

대동강과 주석단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공간

- ① 2번은 닫힌 공간으로 설계
- ② 4번은 열린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적합)

중앙건물의 디자인과 남산과의 연결성

주석단을 중앙건물과 분리, 양쪽의 건물과 광장의 조화성

- ②번이 적합

위의 도면들은 당시 제시되었던 김일성광장의 현상설계 시안이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봤을 때 최종적으로 2번 시안이 채택되었고, 지금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주석

단과 중앙건물이 분리되었으며 주석단 앞은 열병식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고, 대동강과 광장은 열린공간으로 구성하여 공원 같은 느낌이 들게 했다.

새롭게 조성된 또 다른 공간 스팔린거리

김일성광장과 함께 한국전쟁 이후 새롭게 조성된 스팔린거리(현 승리거리)는 중앙광장인 평양대극장과 김일성광장을 연결하는 본평양지역을 관통하는 중심도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이다. 간혹 몇몇 연구에서 일제시기 서선합동전기(西鮮合同電氣) 전차노선과 스팔린거리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제시기 전차노선은 현재 대학습당거리로 조성되었고, 스팔린거리는 기존에 있던 구도로를 확장해 새롭게 만든 도로다. 도시시설로서 독자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던 김일성광장과는 달리 스팔린거리는 간선도로로 각 구역들과 구역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요 간선가로들의 가장자리에는 큰 공공건물과 대규모 주택들이 배치되기 때문에 상업지와 주거지계획 등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사안들과 연동되어야만 했다.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로 도시계획을 받아들인 평양의 도시계획의 특성상 스팔린거리가 45m로 계획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소련의 가로망 정비계획을 살펴보면 가로의 넓이는 가로를 구성하는 건축물 높이의 2배를 초과해야 하며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1.5배라도 초과해야 했다. 중심부 대부분의 건물이 파괴되어 주변 건물을 고려하지 않고 가로를 계획해도 무방했던 평양의 경우 스팔린거리가 45m로 조성되면서 주변 건물의 높이는 22m정도의 4~5층 건물로 건설될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됐다. 게다가 스팔린거리

는 직선거리로 가로 양측 건축방식은 주변 건축방식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거리를 따라 지어지는 건물들의 높이가 일정해야 했으며, 적당한 가로수와 유보도를 설치해야 했다. 이 유보도는 인민군거리와 스팔린거리가 만나는 평양대극장 앞에서 시작해 380m까지의 구간으로 우선 거리의 양쪽 끝에 5m 폭을 가진 인도를 두고, 인도 사이의 중심 부분에 12.5m 폭을 가진 녹지를 조성했다. 유보도를 뚫으로써 스팔린거리 일대는 도심광장과 더불어 도심공원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당시 여러 대중매체에 보도되는 등 1950년대 북한의 전후 재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활용됐다.

공간성은 연속된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공간의 연속성

전후 복구시기인 인민경제 계획 3개년 시기 평양에서 이뤄지 도시건설사업은 주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때문에 1951년부터 대규모 주택지로 예견되어오던 문수지구(옛 평양비행장)의 정비사업은 예산과 인력문제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주택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평양의 도시건설자들은 주택구역을 설정하고 광범위한 주택단지설계를 계획했으나 당시 심각했던 주택 부족 문제와 여러 현안 때문에 주택구획설계를 통한 주택건설은 후순위로 상정하고 일단 정비되고 있던 평양중심부 거리에 개별 다층주택군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했다. 다층 주택이 건설될 거리는 보통문거리, 칠성문거리, 서평양역전거리, 동평양 간선거리의 양측이었으며 도로포장공사가 완료된 거리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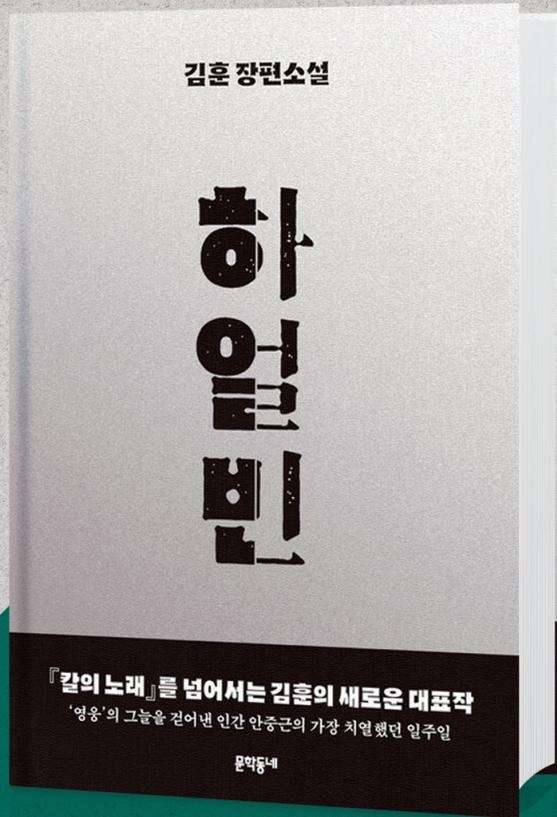
로 양쪽 가로에 상가와 주택이 병합된 건물을 배치하는 형태인 '주변식 배치'로 주택들을 건설할 것을 예정했다. 각 거리가 완공되는 시점인 1955년부터 주택건설사업은 시작될 수 있었다.

무엇보다 과거 평양비행장이었던 문수지구는 1951년부터 전후 복구기간 동안 대규모 주택지를 조성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필지 정비사업도 진행되지 못했다. 주택구획방식도 도입되었지만, 이 또한 평양 중심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뿐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즉 국가가 계획경제 시스템하에 도시계획 즉 인구의 조절이나 산업시설의 위치 등을 지정할 수 있었던 북한은 경제회복과 성장이 중요했던 전후 복구시기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선택'은 민주기지 강화를 상징하기 위한 공간에 집중됐다. 한국전쟁 이후 평양이 북한의 실질적인 수도가 됨에 따라 민주수도를 상징하기 위한 공간을 조성해야 했고, 김일성광장과 스팔린거리에 집중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비슷한 시기 서울의 경우도 경제계획과 연동되는 '국토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서울의 중심부 재건계획보다는 이촌향도와 월남민 등 점차 증가하는 인구에 발맞춰 수도의 영역을 확장하고 수도권을 형성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과 북한의 각 도시들은 역사적으로 전통도시, 근대도시의 경로의존적으로 같은 시기 같은 정치 주체의 도시계획을 경험했다. 현재의 연구들은 남북의 차이를 보고 비교하는 분석방법이 대부분이지만, 이후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도시경관과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역사적 분석을 통해 공통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문화 모니터



문학 속 통일미래 35

'동양 평화'를 향한 '제국인'과 '식민지인'의 인식 충돌

김훈의 『하얼빈』(2022)론

오태호 문학평론가·경희대학교 교수

1. '동양 평화'의 실체와 허상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만, 아무나 평화를 말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국의 논리로 말하는 평화란 허상이다. 평화의 이면에 힘의 배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제국의 평화'는 '전쟁 같은 평화'이거나 '폭력을 양산하는 평화'라는 패러독스가 성립하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그려냈듯 '제국이 강조하는 평화'란 '전쟁은 평화'라는 빅 브라더의 등가적 구호로 치환되어, 평화라는 목적을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일삼는 '전쟁의 시대'를 잉태하게 된다.

김훈의 『하얼빈』(2022)은 '도마 안중근'의 삶을 소설화한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안중근이 자신의 직업을 '포수'와 '무직'이라고 진술한 사실과, 이토의 처단을 위해 동행했던 우덕순이 자신의 직업을 '담배팔이'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포수, 무직, 담배팔이, 이 세 단어의 순수성"이 소설을 쓰는 동안 등대처럼 작가 자신을 인도했다고 부연한다. 세 단어가 "생명의 육질"로 살아 있고 '세상의 위력'에 기대지 않는 "청춘의 언어"였기에,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는 에너지로 폭발"하여 "시대의 악과 맞서는 힘의 대열"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적 대의'를 향한 서른한 살 안중근의 생애가 68세 이토 히로부미의 '문명개화와 동양평화론'에 가려진 듯 서사가 전개된다. 따라서 『하얼빈』은 결말부의 '안중근의 재판과 사형 선고와 집행'에서부터 역순행적 구성으로 새로 읽혀야 한다. 텍스트에서 드러나듯 '이토 히로부미'로부터 '안중근'의 이야기로 서사가 순차적으로 병렬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의병 참모총장 안

중근'의 '자발적 죽음 의지와 자주적 동양평화론'의 실상으로부터 서사를 되감기하여 '제국인 이토의 유신(維新) 논리'로 포장된 '자의적 문명개화와 무력(武力)의 동양평화론'의 허상이 부기되어야 제대로 된 독해가 가능한 것이다.

2. 역순행적 구성으로 재배치하는 서사의 되감기

1) 여순 감옥에서 전해진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의병 참모총장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서른 살의 나이에 '제국의 하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죄로 1910년 3월 26일 교수형에 처해진다. 체포 5개월 만에 사형이 집행된 이후 "나의 시체를 하얼빈에 묻으라"는 유언과는 다르게 여순 감옥의 구내 묘지에 묻혀 생을 마감하게 된다. 거사 이후 러시아 헌병대에게 붙잡히기 직전 "코레아 후라(대한제국 만세)"를 외친 안중근은 "이토를 살해한 후 법정에서 이토의 죄악을 낱알이 진술"하고자 한다. 안중근에게 '동양 평화'란 "동양의 모든 나라가 자주독립하는 것"이기에 '제국의 논리와 무력'으로 동양을 능욕한 이토는 평화를 침해한 학살의 원흉에 해당한다. 안중근은 한국 독립전쟁의 의병 참모총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처단했기 때문에 자신을 전쟁 포로로 대우해달라고 진술한다. 이토가 한국 통감이 된 이래로 한국의 황제를 겁박하여 을사늑약과 정미늑약을 체결하고 이후 한국의 의병을 일본군이 진압하여 십수 만 명을 살해하도록 결정한 학살자이기 때문에 처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사형 선고 이후 자신을 면회 온 빌렘 신부에게 안중근은 개인 이토의 목숨을 없앤 것은 죄일 수 있지만, 동양 평화를 위협했던 '이토의 작용'을 없

앤 것은 죄가 아니며, 이토를 죽인 까닭을 재판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이지만, 이토 생전에 이토에게 그 사실을 전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불운이라고 고백한다.

‘대한국인 안중근’은 명명백백한 신념의 길을 쫓아 한반도를 무력으로 침탈한 이토를 당당하게 소거시킨 ‘의사(義士)’인 것이다.

2) 이토의 하얼빈행 전후

이토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동양의 바다와 대륙이 한길로 이어져 있으며, 등대와 철로가 연결되어 새로운 동양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하얼빈행 이전에 이토는 후임 통감에게 줄 시정 권고 문서에 ‘조선 황제, 조선 유생, 조선 민중이 불운의 축’임을 기록하면서 조선의 유생 세력이 조선의 황제에게 근접하는 통로를 차단하면 민중의 소요가 점차 무력해질 것이라고 의견을 적시한다. ‘돌출하는 저항’에 대해 ‘무단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작동되어야 한다면서 조선 통감이 일본 제국 천황의 직속으로 조선 황제를 대신하여 조선을 통치한다는 내용도 덧붙인다. 특히 이토는 송별 원고에서도 “조선이 평화와 독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길”이 “제국의 틀 안으로 순입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한다.

통감으로서의 이토는 순종 황제의 남행길에 동행하면서, 조선이 철길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고, 철로가 깔려 조선과 일본이 하나가 되어 세계로 나갈 수 있다며, “힘이 길은 만들고 길은 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후 순종에게 부산항에 진입한 일본의 기함 아즈마호에 올라 배를 순시하면서 ‘강과 약 사이의 친선’을 과시하게 하고, 고려조의 폐허인 개성 만

월대에 올라서는 ‘폐허의 주춧돌’을 보며 심란해하는 순종에게 폐허가 오히려 편안해 보인다고 전한다. 그리고 일본인 사진사에게 “폐허를 크게, 조선 황제를 작게 나타내라”고 지시하여, ‘제국과 식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압축하게 한다.

3) 안중근의 하얼빈행 전후

거사 직전에 안중근은 ‘담배팔이’ 동지 우덕순을 만나 하얼빈역 철길을 바라보며 “총 맛이 좋은 자리”라고 말하고 웃는 것으로 그려진다. 우덕순은 1908년 안중근이 의군 참모장장의 직위를 맡아 조선 땅으로 진공할 때 부대원이었던 사람으로 안중근과 동갑이다. 이토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소식을 안중근이 전하자 우덕순은 함께 ‘이토를 처단할 운명’임을 감지한다.

원래 황해도 진남포에서 작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사업에 힘쓰던 안중근은 <대한매일신보>에서 의병들이 일본군에 의해 진압 살해되는 모습에 비분강개하게 된다. 이후 두만강을 건너고 간도와 러시아령의 내륙 산간마을, 연해주의 바닷가를 거쳐 하바롭스크에서 기선을 타고 아무르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눌러야 한다는 생각”이 ‘골병’처럼 몸속에서 자라난다. ‘이토의 목숨’을 죽여서 없애다가보다는 ‘이토의 존재 소거’가 신념화되면서 이토의 작동을 멈추려면 이토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이다. 이후 1909년 10월에 접한 1909년 2월 신문에서 고려 왕궁 만월대의 폐허를 순행하는 순종과 이토의 사진이 실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이토의 사진’이 안중근에게 조준점 너머에서 ‘자신을 부르는 손짓’임을 감지한다.

4) 한국 통감 이토의 만행

작품은 일본 천황 ‘메이지’가 도쿄의 황궁에서 12세의 대한제국 황태자 이은을 1908년 1월 7일 접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이은은 기모노를 입고 군복을 입은 메이지를 마주하는데, 낮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 한국 황제의 명령으로 일본에 유학을 왔으며 잘 지도해 달라고 일본어로 말하는 이은의 입을 보면서 메이지는 ‘왕자 노릇의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황실 문장이 새겨진 탁상시계를 선물하면서, “부디 시간과 더불어 새로워져라. 새롭게 태어나라.”는 말과 함께 시계가 “짐이 내리는 시간”이라고 덧붙인다.

이토는 강제로 고종을 퇴위시키고 차남 이척을 순종으로 만들고 국권을 포기하는 조선 대신들의 도장을 받아내서 반도의 통치권을 인수하는 1905년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체결 이후 조선 민심의 폭발을 목격한다. 사대부들이 잇달아 자결하면서 동시다발적 죽음들이 ‘충의 반열’에 오르는데, 이토는 사대부들의 자결보다 기생과 거지까지 대열에 합세한 ‘무지렁이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한다. 결국 이토는 ‘대토벌 계획’을 세워 반도의 중심부에서 남쪽으로 ‘폭민의 종자’를 밀어내 남해 바다에 빠뜨려 박멸하자는 작전 구상을 기획한다.

3. 정당방위로서의 ‘이토 처단’

작품의 <후기>에는 안중근이 1910년 뮌헨 주교의 판단에 따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남아 있었지만, 1993년 8월 김수환 추기경의 추모 미사 집전 이후 공식적으로 ‘추모의 대상’이 되었음을 기록한다. 안중근의 행위가 ‘정당방위’이고 ‘국권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으로서 타당

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지속된 유해 발굴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의 행방에 관한 유의미한 정보는 아직도 없다.

작가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약육강식의 쓰나미”로 다가온 일제의 ‘위장된 문명개화’에 맞서 ‘한국 청년 안중근’이 “세계사적 규모의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마주 서서 ‘동양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권총 한 자루’의 물리력과 “실탄 일곱 발이 쟁여진 탄창 한 개”와 “강제로 빌린(혹은 빼앗은) 여비 백루블”을 매개로 저항했음을 기록한다. 불과 ‘서른한 살의 청년’으로 자신의 온몸을 던진 청년을 향한 위령 서사를 제공한 셈이다.

하지만 김훈의 『하얼빈』은 이토를 먼저 배치하고 안중근을 나중에 배치하는 서사적 전략으로 일관함으로써 마치 작품의 주인공이 ‘이토 히로부미’인 듯 기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물론 작품 후반부로 갈수록, 그리고 서사가 마무리된 뒤에 배치된 <후기·주석>과 <작가의 말>을 통해 안중근 의사의 대의가 피력되고 일가족의 비극적 수난이 조명되면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아쉬움을 상쇄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의 서사가 이토의 서사 앞에 배치되었을 때 ‘진정한 정당방위로서의 폭력’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었다는 사후적 판단이 든다. ‘진정한 평화’는 도도한 정의의 역사가 폭력과 학살의 상흔을 넘어 선명하게 음미될 때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태호는 2001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문학평론에 당선되었다. 평론집으로 『오래된 서사』, 『여백의 시학』, 『환상통을 읽다』, 『허공의 지도』, 『공명하는 마음들』 등이 있으며, 연구서로 『문학으로 읽는 북한』, 『한반도 평화문학을 상상하다 - 21세기 북한문학의 현장』 등이 있다. 현재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표로 보는 남과 북 44

남북 최초의 연하엽서

이상현 민화협 체육교류위원·대한하키협회 회장

2023년 계묘년이 밝았다. 지난 몇 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경제침체의 긴 터널이 올해에는 끝나기를 바란다. 새해가 되면 이 같이 새로운 희망이 담긴 소망을 마음속으로 빌기 마련이다. 또한 친지와 지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며, 덕담을 주고받곤 한다. 요즘은 온라인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새해 인사를 많이 하곤 있는데, 여전히 새해 연하장을 주고받는 풍습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의 우편제도 속에서도 이러한 풍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연하엽서이다. 북측에서는 새해 엽서로 불린다. 북측에서는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연하(年賀)엽서의 ‘연하’도 뜻을 풀어보면 같은 뜻이다. 연하엽서는 보통 신년을 축하하는 내용의 그림이 뒷면에 전면으로 실리고, 앞면에 간략한 인사문구, 발신인과 수취인의 주소 기입란 그리고 우표인면이 인쇄되어 있다.

연하엽서는 북측이 먼저 발행했다. 1953년 12월에 2종의 엽서를 발행했다. ‘1953. 승리의 새해’라는 문구와 함께 군인과 노동자, 낫을 든 여인의 모습이 국기와 해방탑을 배경으로 묘사되어 있다. 원화의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원색적인 색채와

강한 표정이 인상적이다. 또 하나의 엽서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건물과 공장을 재건하는 모습이 하늘색과 푸른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깔끔하게 묘사되어 있다. ‘모든 것을 전후인민경제 복구 발전으로!’라는 문구가 담겨있다. 두 엽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전쟁의 승리자를 자임하며, 이를 바탕으로 파괴된 경제시설의 재건을 통해 희망을 제시함을 알 수 있다. 이 엽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액면이 5원이 아닌 ‘5원+5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통상 엽서의 요금에 5원인데, 뒷면의 인쇄된 컬러 그림의 비용까지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편 요금은 5원만 인정되고, 나머지 5원은 제작비용으로 이해하면 된다.

남측은 1957년 12월에 최초의 연하엽서를 발행하였다. 앞면 우표인면에는 베들레헴의 별과 솔방울이 인쇄되어 있고, 뒷면에는 소나무와 한자로 ‘囍(쌍희 희)’자가 단색으로 인쇄되어 있다. 판매 가격은 15환이었고, 30만 매가 인쇄되어 판매되었다. 재미있는 점은 당시 일반엽서의 요금이 20환이었는데, 연하엽서의 요금이 5환 싸게 액면이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북측과 달리 단색으로 인쇄하여 추가 비용이 들지는 않았겠지만, 신년 연하엽서의 의미를 살려 오히려 저렴하게 이용할



South Korea

1. 1957.12.11. / 1958년용 연하엽서 / 앞, 뒷면

North Korea

- 1. 1953.12.09. / 1954년 새해엽서 / 앞, 뒷면, 우표 인면 확대
- 2. 1953.12.21. / 1954년 새해엽서 / 앞, 뒷면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와 같이 남북의 연하엽서는 1953년과 57년 이후 계속해서 발행되고 있다. 북측은 근래에는 매년 1월 1일 5종의 연하엽서를, 남측은 11월경에 1종의 연하엽서를 발행하고 있다. 다만 남측은 봉투에 연하장을 넣는 방식의 봉투식 연하장을 5종류 정도 함께 발행하고 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연하엽서라도 공동으로 발행하여, 남북이 새해의 희망이 담긴 따뜻한 인사를 전할 날을 고대해본다. 🌈

이상현은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전국총학생회연합인 학생연대21 의장,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 대한하키향회 회장, 대한체육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평양의 조선우표사를 방문하기도 했던 우표수집가로서 우표를 통해 남과 북의 공통분모를 찾아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 남북 우표 교류에 대한 공헌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영화 속 북한 이야기 24

수명이 다한 것은 무엇이었나 <수명이 다 됐소>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수명이 다 됐소>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2022년 방영한 방송물이다. 생활 속의 교훈을 찾아 고치자는 ‘이런 현상을 없애시다’의 하나로 리영일이 시나리오를 쓰고, 윤혁이 연출한 16분 길이의 방송물이다.

음료공장의 포장직장인 허대식이 과거의 학력만 믿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우지 않았다가 자신이 배운 지식이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첨단 과학기술 공부를 부지런히 하게 된다는 줄거리다. 부지런히 첨단 과학기술을 배워서 뒤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주제의 교양 방송이다.

“이 설비도 수명이 다 됐소”

허대식은 음료공장의 포장직장 직장장이다. 한덕수 평양경공업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실력파이다. 공장에서 바쁘게 돌아가던 라인에서 사이렌이 울린다. 기계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다. 허대식은 경공업대학 최우등 실력을 발휘해서 가볍게 고친다. 박현호 작업반장이 물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수명이 다됐고, 기술이 높아지면 생산설비도 따라가야 하는데, 수명이 다 됐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기술은 높아졌지만, 생산 설비는 발전하는 기술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말한다. 대식의 집에는 대식의 경공업대학 일용기계과 주간 졸업장과 부인 임충심의 공학기사 자격증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부인은 선교공업대학 자동화학과 야간 졸업증이 있었다. 대식은 부인이 야간으로 졸업한 것이 아쉬웠다. 그래서 원격교육으로 자동화 과정을 배우고 있는 부인이 학위를 따기를 기대했다.

부인은 오늘도 원격교육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 밥상을 차리는 것을 보고는 허대식이 나섰다. 앞치마를 두르고는 “졸업증 옆에 원격대학 졸업증을 하나 더 걸어야 나하고 비슷해지지 않아” 하면서

어서 교육을 잘 받으라고 하였다. 대식은 부인의 “졸업증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다. 부인이 부탁했다. “당신네 공장에서 현장견학 좀 하게 도와달라”, 대식은 부담스러웠다. “프로그램이면 첨단인데...” 대식네 공장은 첨단이 아니고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답을 하지 못하였다.

과학기술운영 실적이 저조한 대식

대식은 학력만 믿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직장에 출근한 대식에서 ‘기술학습제강’을 주었다. 오늘은 과학기술보급실 운영 날이었고, 오늘 강사는 바로 대식이였다. ‘아 그런가’ 하고 쳐다보는데, 공장 책장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는 잡지가 보였다. 누군가 과학기술 잡지를 접어서 캐비닛 위에다 던져둔 것이다. 대식은 기가 찼다. “책 건사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구만.” 잡지를 내려서 펼쳤다.

아빨싸. 잡지에는 ‘허대식’이라고 크게 쓰여 있었다. 허대식이 잡지를 읽지도 않고, 이름만 쓰고 캐비닛 위에다 ‘획’하니 던져둔 것이다. 무안해하

는 허대식에게 마침 전화가 왔다. 공장 기사장이었다. 허대식은 과학기술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는 기사장을 만났다.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일지를 보니, 동무네 직장이 제일 한심하더구만요.”, “분기 생산이 급하다 보니.” 허대식이 변명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직장장동무 생산실적의 열쇠가 어디에 있소. 다 과학기술에 있단 말이요. 동무의 태도가 문제요. 오늘은 과학기술일꾼들이 모두 참가하는 회의가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봅시다.”

일이 생겼다. 직장장에게 혼나고 돌아왔더니 공장설비가 또 오작동을 일으켰다. 작업반장 박현호는 걱정이 컸다. 기계가 멈추었고, 프로그램도 완전히 멈추었다. 오늘은 하필 공장의 기술일꾼들 모두가 회의에 참가하고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데, ‘걱정하지 말아, 내가 있잖아’하면서 대식이 나섰다. 지금까지 공장에서 생긴 이런저런 기술적인 문제들은 대식이 해결했었다. 게다가 허대식 직장장은 경공업대학 주간 과정 최우등생이 아닌가. 이런 고장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는 척하고, 프로그램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고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프로그램 시스템이 대식이 배운 것과 달랐다. 새롭게 고친 이후의 프로그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스템이었다.

‘아뵐싸!’ 당황한 대식은 태연한 척하면서 급하게 이런저런 자료도 찾았다. ‘아! 그렇지’하고는 과학기술보급실로도 급하게 달려갔다. 그런데 과학기술보급실에서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강연이 진행 중이었다. 뾰족한 수가 없었다. 대식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모습을 지켜보던 박현호 작업반장이 눈치를 챘다.

대학 스승님에게 전화를 걸어 SOS를 요청했다. “선생님 프로그램을 갱신한 다음부터 조정판이 자주 고장납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내가 갔으면 좋겠지만 강의가 있어서 갈 수 없어. 내가 못가는 대신 유능한 사람을 보내겠으니 걱정말게.”

교수는 원격교육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대식의 처 임충심이었다. 교수는 전후 사정을 알려주고는 음료공장으로 가서 박현호 반장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고쳐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현장에서 설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침 교수를 찾아온 나이 지긋한 원격교육생에게도 음료공장으로 가서 충심이 프로그램을 고치는 것을 잘 보고 배우라고 하였다.

지도 교수에게서 연락을 받은 충심은 남편 공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식은 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우선 공장을 고치는 것이 급했다. ‘유능한 사람’을 보내준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교수가 보내는 ‘유능한 사람’을 맞이하느라 공장 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유능한 사람이 왔다. 사실은 교수가 보낸 원격교육생이었는데, 나이도 있고 차림새도 좋아서 대식은 원격교육생의 외모만 보고는 교수가 보낸 ‘유능한 사람’으로 알았다.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려는데, 부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왔어?”,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지.” 대식은 아침에 부인이 공장 참관을 요청했던 것이 생각났다.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현장견학을 오다니, 게다가 프로그램도 고장인데.’

대식은 부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억지로 막아섰다. 부인 미안한데 심부름 하나만 해 달라면서, 바쁘다는 부인을 붙잡고는 ‘시원한 것 좀 사오라’고 하였다. 그렇게 시간을 벌고 있는 사이에 박현호 반장은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가 오느냐’고 물었고, 대식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호는 충심을 컴퓨터 조정실로 모시고 갔다. 그렇게 프로

그램을 새로 짜고 고치고 있었지만, 대식은 자기 부인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정말로 수명이 다한 것은 내 지식이었소

박현호 작업반장이 나섰다. “우리 교수님이 보내 준 유능한 사람이 바로 아주머니였습니다”, “당신이지!” 대식이 어리둥절하는 데, 공장 기사장이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기사장은 나이 지긋한 원격교육생을 보고 물었다.

“당신은 ‘비누공장 설비과장’이 아니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한 부원입니다. 기술이 뒤처지다 보니 과정에서 부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충심을 보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 유능한 분이 바로 아주머니였군요.” 옆에서 부끄러워하던 대식이 나서서 잘못을 반성한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젯날 학력에만 만족하며 학습을 게을리하다 보니 이렇게 뒤떨어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결국, 수명이 다한 것은 설비가 아니라 제 머릿속의 지식이었습니다.”

“웁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학습을 게을리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과학으로 비약하는 오늘의 시대에 따라 설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다음날 길에서도 과학기술 책을 들여다보면서 부인에게 물어보는 대식의 아침 출근길 풍경으로 영화는 끝난다. 🌈

전영선은 한양대학교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민화협 통일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다. 남북사회문화 및 북한문화예술에 대한 다수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국내 최고의 북한문화예술 전문가이다.

① 제2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 및 민화협 창립 24주년 후원의 날

민족화해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시민들의 굳센 통일 의지와 평화 실천은 계속될 것

김혜민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자단

사진 김성현 객원작가



왼쪽부터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숙임 (사)조각보 이사장,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 김석중 경향신문사 사장.

한국노총 통일위원회와 김숙임 조각보 이사장 수상

2022년 12월 13일 제2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과 민화협 창립 24주년 기념 후원의 날이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민화협과 경향신문 공동주최로 개최한 제20회 민족화해상 시상식은 수상자로 통일준비 부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통일위원회'와 민간교류 부문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이 선정됐다.

제20회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는 주요 선정기준으로 '민족화해와 남북통일을 위해 오랫동안 묵묵하게 활동해 온 역사성과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실천성'을 꼽았다. 심사결과를 발표한 정인성 심사위원은 "한국노총 통일위원회는 2001년부터 남북 노동자 간 교류와 연대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고, 일제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 추모행사 등 우리 역사교육을 전개하며, 노동 현장의 남북교류와 통일준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했다. 김숙임 사단법인 조각보 이사장에 대해서는 "민족화해와 사회통합에 앞장선 여성 평화운동가"라며, "2011년 사단법인 조각보를 창립하여 동북아 이주동포여성들과 남북 통일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에 전념하면서, 통일운동의 주체를 여성과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확장"한 것을 높게 평가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수상소감에 나선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은 “민족을 떠나서 그 어떤 계급 계층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가 통일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일 것”이라며, 수상의 기쁨을 현장에 있는 모든 노동자와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악화되는 노동환경 속에서 때로 통일운동이 뒤로 밀리기도 하지만, 민족의 자주권을 지켜내고,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을 이루자는 노동자의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라며 더욱 높은 수준의 남북 노동자 통일운동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이어 김숙임 이사장은 “조각보에서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일본 등에서 온 이주동포여성들과 만나면서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아온 그들의 삶을 알고 이해하게 되었다”며 “우리 사회 내 경직된 틀을 깨고 남과 북의 협소한 경계를 넘어 혼란의 시대를 디아스포라 코리안과 함께 우리 사회 모든 편견과 차별과 혐오를 넘어 실질적인 통일준비로 새로운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석중 경향신문사 사장도 참석해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함께 나눴다. 김석중 경향신문사 사장은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으며 조성된 평화의 기운이 차갑게 경색되고 있는 지금, 민간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활동해 온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전사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남북통일과 민족화해 실천에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엇보다 2022년은 민족화해상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념하는 영상에서 1회 수상자인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는 “어느덧 민족화해상이 20년이 되었다고 하니 감개무량하다”며 “민족화해상을 통해 활동가들의 노고를 공유하고 그들에게 우정 어린 응원을 보내며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19회 수상자인 이계환 통일뉴스 대표는 “민화협이 바로서야 통일영역이 제대로 선다”라며, “민화협이 민족화해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갈 때 모든 단체들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 밖에 3회 수상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홍상영 사무총장, 8회 수상단체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1. 민화협 창립 2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왼쪽부터)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허명 상임의장, 김형진 상임의장, 한총목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2.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민화협 24주년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3. 민화협 전현직 임원들이 함께 24주년 기념 커팅을 하고 있다.

연탄나눔'의 원기준 사무총장, 13회 수상단체 '한국YWCA연합회'의 원영희 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남겼다.

제20회 민족화해상 심사위원회는 최완규 심사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상임대표)을 비롯해 권영경(통일교육원 명예교수),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실장), 김성민(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단장), 김현경(MBC통일방송연구소 소장), 박병규(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 정인성(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변호사)으로 구성됐다.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통일운동 펼칠 것

이어 민화협 창립 24주년 기념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렸다. 현장에는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김덕룡 전 대표상임의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민화협 상임의장단(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공동의장단(김삼열 한국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송광석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회장,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 회장, 장대진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상임대표, 최영선 세계평화여성연합 회장 등) 등 민화협 전·

현직 임원과 180여개의 회원단체 관계자와 주요 외부들이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24년간 이어온 민화협의 활동을 돌이켜 보며 “남북화해와 남남대화는 민화협의 변하지 않은 사명이다”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온 민화협의 가치에 대해 전했다. 이어 “불신을 믿음으로, 배제를 화합으로, 포기를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 내며, 평화의 반전을 위해 뛰겠다”며,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향후 민화협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24주년을 맞이한 민화협과 제20회 민족화해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권 장관은 ‘국민적 염원이 응축된 통일 의지 확산’을 언급하며, 민족화해와 통일을 위해 정당, 종교,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민화협의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에 대한 분열보다 무관심을 더 걱정해야 할 정도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가 식어가는 현재 상황을 염려했다. 이어 “국민들의 마음마다 통일의 불꽃을 다시 일으키고 국민 모두가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사회 곳곳에서 통일 담론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민화협이 더 적극 나서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던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은 “당국자 간 대화가 단절되고, 군사적 대립이 끊이지 않

는 현재 남북 상황을 보면서, 2023년에는 반전된 분위기로 민화협 창립기념일이 희망 가득한 연말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민화협 24주년을 축하했다. 이어 한중목 6·15남측위원회 공동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전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만들자는 모토로,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민화협이 서있다”며, “정전 70년이 되는 내년을 평화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민화협과의 연대를 강조했다.

김형진 상임의장은 “우리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민족 모두가 핵개발에서 벗어나 남북이 평화롭게 화해하고 교류하면서 통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며, “한반도 봄날”을 기대하며 그 속에 민화협이 함께하기를 희망했다. 허영 상임의장은 “헌법에서와 같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의 사명”이라며, “남북 관계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민화협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화협 활동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보였다.

민화협 내외빈 축사에 이어 민화협 24년 활동이 담긴 영상 시청과 ‘장광팔, 독고량의 통일담담’과 바리톤 심형진의 축하 공연, 24주년 커팅식 있었다. 이날 150여 명의 참석자들은 지난 24년 민화협의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앞으로도 회원단체와 함께하는 민화협의 활동을 기대하기도 했다. 민화협은 2023년에도 ‘민족화해와 남북통일’이라는 우리 시대의 소명을 국민과 회원단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갈 것이다. 🌈



3

통일준비를 위한 연구자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들

이옴 민화협 1020통일공감기재단
사진 김도형 객원작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6시 정동1928아트센터 이벤트 홀에서 <롯데장학재단-민화협,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롯데학술연구자 오픈토크>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롯데장학재단과 민화협이 함께 진행하는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그간 코로나19로 대면 교류할 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번에 특별히 마련되었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민간차원에서 남북문제와 통일준비에 관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신진연구자들의 새로운 관점과 학문적 융합을 반영한 연구를 장려하고자 2019년부터 시작했다. 무엇보다 심사위원과 연구자 간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는 '심사위원 멘토링' 프로그램도 병행하면서, 연구자 역량 강화와 연구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매년 하반기 학술심포지엄 개최와 민화협 격월간지 <민족화해>에 연구자들의 연

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성과를 알리고 있다.

이번 행사는 1회부터 4회까지의 연구자들이 모여 오픈토크를 진행한 후 만찬 시간을 가지는 순서로 구성됐다. 오픈토크는 김진환 국립통일교육원 교수와 조정아 통일연구원 부원장의 진행과, 패널로 박수현 한국문화관광연구원(1회 박사급), 오주연 출판사 힐데와소피 대표(2회 석사급), 김희진 전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부장(2회 박사급), 박수진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3회 석사급), 허선혜 전북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소 연구교수(3회 박사급), 이정진 KT 남북협력TF장(4회 박사급) 등이 참석했다.

오픈토크 진행을 맡은 두 교수는 이번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심사위원이자 연구자들의 멘토이기도 하다.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패널로 참





석한 7명 연구자들은 각자 연구했던 논문 주제를 소개하고, 이번 학술사업의 장단점과 연구자로서의 고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정치·외교·안보에 국한된 기존 공모전과 달리 롯데장학재단의 학술사업은 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 연구주제 폭이 넓어, 북한 만화영화나 최근 대두되는 탄소중립과 같은 여러 연구들을 함께 공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자연스레 북한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야기 나눴는데, 단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한 남북문제를 어떻게 하면 학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도 느낄 수 있었다. 또 북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나눴는데, 오픈소스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를 제안했다. 또 통일에 대한 여러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에게 평화와 통일에 대한 담론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모든 패널들이 공통으로 긍정 평가를 준 부분이 '심사위원 멘토링' 프로그램이었다. 연구과정에서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 마련인데,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피드백도 받고 나아가 진로 측면에서도 여러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불가피하지만 그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연구자들 간 대면교류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 오픈토크와 같은 모임뿐만 아니라 공동주제를 함께 연구하는 한층 발전된 학술 모임도 추진되길 희망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 만찬 시간에도 연구자들의 교류는 계속 되었다. 각자 학술적인 교류와 함께 남북한 문제 및 현안들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제5회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모 소식은 2023년 2월 민화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 한반도평화컨퍼런스

워싱턴에 전해진 한반도 평화 공공외교

윤은주 (사)뉴코리아 대표·민화협 회원사업위원장



2022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주최 '2022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2022 KOREA PEACE CONFERENCE)'가 열렸다. LA를 비롯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휴스턴, 애틀랜타, 시카고, 뉴욕, 마이애미,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지에서 약 300여 명의 한인이 참여했다. 지난 회기 HR3446법안¹을 발의했던 브레드

서먼 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하여 그레고리 믹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제리 네들러 전 법사위원장, 주디 추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장 등 10여 의원들이 참석했고 총 20의원실이 함께 했다.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평화공공외교를 지원해온 (사)뉴코리아는 한반도 평화만들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는 뜻깊은 현장에 함께 했다.

2018년 '정의, 공정, 평화, 통일, 민주, 참여'를 기치로 창립한 KAPAC은 한인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왔다. 특히 상하원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한인 사회의 권익을 호소할 수 있도록 안내

¹ HR3446 2022년 5월 20일 하원에 발의된 법안으로 북한 방문에 대한 인도주의적 고려, 한국 전쟁의 공식적 종전 촉구, 북미 연락 사무소 설립 등을 규정하고 있다. 46명의 의원서명이 있었지만 하원 통과는 불발됐다.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서먼 의원은 차기에도 재발의 할 의사를 밝혔다.



1. HR3446(한반도평화법안) 발의한 브레드 셔먼 의원을 방문한 해외 동포들.
 2. 캐피탈 힐(Capital Hill) 기자회견 장소에서 발언하고 있는 앤디 김 의원
 과 김경협, 임종성, 김민철 의원.
 3. 브레드 셔먼 의원과 필자.

자 역할을 해왔다. 이번 컨퍼런스는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KAPAC 최광철 대표는 이스라엘의 권익 옹호 단체 AIPAC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미국 내에서 인구학적으로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AIPAC 행사에는 대통령도 참석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행정부와 더불어 사법부의 영향력이 강력한 미국 정치에 있어서 유권자들이 각 지역의 상하원 의원

들을 직접 만나 관계를 형성함은 정치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미국 내 한인들의 대소사는 물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보편적 가치 추구 활동도 가능하다.

한반도 평화 만들어낼 공공외교의 힘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금을 모아 성사된 이번 컨퍼런스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례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독일, 한국 등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관심이 더욱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을 이끄는 김경협 의원과 임종성 의원, 김민철 의원도 참석했는데 향후 한미 의원 외교의 발전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올해로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이 멈춰선 지 어언 70년이 된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휴전 상태의 전쟁을 끝내고 남북과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한반도 평화는 완성된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부침을 계속하고 국제사회 정치 역학이 복잡하게 작동되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평화공공외교가 조심스레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 각국의 한인 디아스포라 역량을 한껏 끌어 올려 연대하고 조직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 남북관계는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2022년 2월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제정했다. 해외동포들을 향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한 것이다. 민족화합과 평화통일 운동 25년의 역사를 지닌 민화협이 올해부터는 남북이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면 좋겠다. 민화협 차원의 평화공공외교가 동포들과 발맞추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

금강산관광 개시 24주년의 의미

백천호 현대아산 상무

2022년 5월, 새 정부가 새로운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지금 우리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실현하는데 금강산관광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금강산관광 24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1998년 11월 18일, 강원도 동해항에서 889명의 관광객을 태운 금강호는 분단 이후 최초로 금강산을 향한 역사적인 항해의 첫 돛을 올렸다. 그날의 기쁨과 환희는 당시 우리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되었고, 시작부터 이 사업에 몸을 담고 있는 저에게는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후 10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고비고비를 남북이 슬기롭게 극복해 내면서 금강산을 찾는 관광객도 꾸준히 늘어났고, 200만 명 가까운 남측 국민이 금강산을 찾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08년 7월 뜻하지 않은 관광객 사망사고로 인해 관광이 중단되었고 지금까지도 시작을 못하고 있다. 때론 남북의 사업자가 만나 재개를 합의하기도 했고 남북 정부 간 협의도 있었다. 불과 3년 전에는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만나 재개를 약속했지만 격변하는 국내외 정치 상황으로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의 깊고 짙은 골짜기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비록 지금은 발이 묶여 있지만, 금강산관광 10년은 남북관계에 작지 않은 의미와 자취를 남겼다. 우선 금강산관광은 한국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커 커이 쌓여온 남북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금씩 허물어 가는 시작이었고 과정이었다. 처음에는 대형 유람선을 통해 남과 북을 오고 갔지만, 2003년부터는 철책으로 상징되던 군사분계선¹을 넘어 육로를 통해 버스와 차량으로 직접 금강산을 찾게 되었다.

남북 간 마음의 문 열었던 금강산관광

군사분계선이 열리면서 남과 북의 신뢰의 문도 빠르게 열리기 시작했다. 남북의 이산가족분들이 금강산에서 서로 만나 혈육의 정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문화, 예술, 학술, 청년, 인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금강산을 통해 빠르게 증가했다. 금강산에 상설 이산가족면회소도 지어졌고, 남북 합동 영농장, 과수원, 양돈장 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점점 늘어 갔다.

특히 금강산관광으로 시작된 남북 간 교류협력이 개성공단이라는 실질적 경제협력사업으로 이어졌다. 2003년 시작된 개성공단은 124개 남측 기업과 54,000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이 매일 상시 근무하면서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또 하나의 공간이었다. 동으로는 금강산, 서로는 개성공단이라는 작지만 소중한 남북의 접점을 통해 서

1 실제 남북 간의 군사분계선은 철책이 아닌 500~600미터 간격으로 세워진 푯말로 동해안 간성에서 서해안 강화 북방에 이르기까지 총 155마일(248km)에 걸쳐 1,292개의 푯말이 있다.



금강산 관광의 중심 온정각의 전경.(현대아산)

로 교류, 협력함으로써 평화, 공존을 위한 초석을 다져갔다.

금강산관광의 밝은 부분이 있다면 그늘도 있다. 2008년 7월의 관광객 사망사고가 대표적인 예이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대라는 민간 사업자가 주도하다 보니, 안전과 운영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스스로의 엄격함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남북 공동관리위원회와 같은 민관 공동 거버넌스를 통해 안전, 인프라 등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와 더불어 금강산관광 사업 자체가 남북관계 변화, 사업에 대한 엇갈린 정치적 견해 등 정치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남북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 협력을 위해 시작한 첫 사업인 만큼, 보다 소중하고 의미있게 생각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남는다.

2022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의 기조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금강산관광 역시 '담대한 구상'의 실현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 북측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원산, 백두산 등 관광 사업을 통해 경제 개발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금강산관광을 통

해 남북 교류, 협력의 증대와 남북 주민 간 직접 소통을 확대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조성된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첨예한 갈등과 긴장을 관광과 소통을 통해 보다 부드럽고, 빨리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측은 장기간의 관광 중단 등으로 금강산 독자 개발 구상 입장을 밝히고 독자적인 총개발계획 수립, 남측 시설물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은 힘들지만 남과 북이 서로 마주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으로 확신한다.

금강산관광 재개 통한 '담대한 구상' 성공을 기원한다

현대는 금강산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북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북의 정치적 상황이나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에도 사업이 중단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금강산관광이 다시 시작해 안정을 찾는다면, 금강산과 함께 동해안의 관광 명소인 원산을 공동으로 개발해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동해안을 동북아 관광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을 도로와 철도로 다시 잇고, 항공과 크루즈를 통해 동북아시아와 세계로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4년 전 금강호의 첫 출항이 그러했듯이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하루빨리 열려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

백천호는 1992년 현대건설 입사해 1998년 현대그룹 대북사업단 소속으로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 참여했다. 현대아산 금강산사업소(종합팀장)와 개성사업소(총소장) 등 북한 현지에서 10여년간 근무했다. 현재 현대아산 관광경협본부장 및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남북 하나로 묶는 월드컵 유치로 한반도 평화 만들자

김동선 경기대학교 교수·민화협 남북체육교류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8월 19일 담화를 통해 북한의 ‘국체’인 핵을 경제적 인센티브와 맞바꾸지 않겠다고 담대한 구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2022.9.8)’에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가 만장일치로 채택, 김 위원장 역시 절대 먼저 핵 포기, 비핵화는 없고 어떤 협상도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으며, 핵은 북한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표명하였다.¹

북한이 스스로 핵 개발을 단념하고 비핵화 조치 협상테이블에 남북이 마주하기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본다. 남북 정상이 만나고 우호적인 관계였던 2018년 9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와 하고 싶다는 의향이 담긴 친서를 보냈을 만큼 핵 문제와 관한 한 한국국제 기조에 변함이 없다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핵·번영·평화의 한

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뚝뚝 걸어 잠근 북측의 빗장을 풀고 대면할 수 있도록 다각적, 다방면으로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여 다시금 평화의 불씨를 살려내야 한다.

평화의 메신저 역할 했던 스포츠 교류

스포츠는 분단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첨병 역할을 해왔다. 우호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스포츠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빈번한 스포츠 교류는 다른 분야의 교류협력으로 이어지는 순기능으로 작용해왔다.

노태우 정부는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통해 상호 동질감 및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취지로 1990년 10월 11일 첫 번째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 같은 명칭으로 2002년과 2005년 세 차례의 축구대회가 열렸다. 이렇게 시작된 남북 스포츠 교류가 1991년 4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6월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출전, 그리고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등 스포츠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 최초 남북 동시 입장은 남북이 하나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 세계가 감동 그 자체였다. 2018

1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18년 8월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북노동자동일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마친 남북 노동자 선수단 대표팀이 그라운드를 돌며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



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역대 11번째의 남북 공동입장, 그리고 단일팀 참가 성과를 이뤄냈다. 이 외에도 통일 농구, 탁구, 태권도시범단 등 상호교류 협력사업 또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 성사 및 다른 분야 교류협력 확대에 기여했다.

한반도 전쟁위기설마저 야기되었던 남북 간 적대적 정치 상황을 반전시킨 괄목할 만한 스포츠 이벤트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회참여를 꾸준히 설득하고 국제사회와 IOC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끊임없이 대회참가를 독려했다.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단파견 등 북한의 참가로 올림픽 정신이 구현된 평화올림픽이었고,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한 안전올림픽이었다.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로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됨으로써 평창올림픽은 한반도 및 전 세계에 평화 메시지를 전한 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지

평이 되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이 5·1경기장에 모인 15만 북한 주민 앞에서 자유롭게 연설한 것은 파격적인 일정이었다. 이는 북한의 변화와 아울러 한반도가 새로운 시대로 재전환한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또한 이 기간 중 남북 정상은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유치를 합의하고, 전 세계에 천명하였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CVID)와 체제안정보장(CVIG)에 대한 합의 결렬로² 안타깝게도 남북관계도 소강상태로 퇴보, 이미 단일팀 및 공동개최 등 스포츠 교류 및 합의 사항마저도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무산되고 말았다. 그 이후 남북교류는 코로나19의 영향과 겹쳐 거의 중단된 상태로 봉착해 있다.

²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8115>, 2019.10.10

2018년 8월 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라라 봉 카르노(GB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남북 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든 남측 여자농구 남북단일팀 주장 임영희, 북측 남자 축구 주경철을 선두로 공동입장하고 있다. ©연합



스포츠 향한 북의 높은 관심

현재 정세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스포츠외교’는 쉽지 않겠지만 향후 도래할 국제대회에 남북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아무리 거대하고 이상적인 구상이라 하더라도 출발은 바로 대화로부터 시작된다. 서로 만나야 하고 대화를 해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갈등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해야만 평화가 정착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가깝게는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인 2023년 진주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파리올림픽의 예선전이기도 하다.³ 또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한반도 정세가 변할 경우 북한에 있어 외교를 위한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인 중국에서 개최된다는 것도 북한의 참가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부분이다.

아울러 2030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단일팀 구성을 추진한다. 지난해 말 카타르에서 전 세계인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축제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월드컵 중계권료는 1,200억 원대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계권을 사서 실시간 방송으로 경기를 시청했다. 북한은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측에 중계 지원을 요청했고, 한국 3사 지상파의 한반도 중계권을 양도받은 조선중앙TV는 카타르월드컵의 거의 모든 경기를 녹화중계해 주민들이 볼 수 있었다. 한국 대 브라질 16강전 경기를 녹화중계 방송했다. 김정은 집권 후 북한이 월드컵에서 한국 팀 경기를 중계한 건 처음인데, 손흥민, 황희찬 등 우리 선수들 면면을 언급했고, 우리 팀의 조별예선 성적도 전하며 비교적 중립적으로 상

³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세히 설명했다. 태극기는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현대차 광고는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다.

남북 평화 월드컵,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은 월드컵에 1954년 그리고 1986년부터 2022년까지 11회에 걸쳐 출전하여 2002년 한일대회에서는 4강까지 올랐다. 북한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우승 후보 이탈리아를 이기고 8강에 진출한 바 있다.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는 중도 기권했다. 2019년에는 예선전을 치렀으나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경기가 중단되었다가 2021년 재개되었을 때 선수 보호를 이유로 기권을 선언했다. FIFA는 북한이 치렀던 모든 경기를 무효 처리했고 벌금도 부과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대회 출전도 금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2030년 월드컵에서나 다시 출전할 수 있다.

북한의 체재결속을 위해 체육강국 건설을 천명해 온 김정은 위원장은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져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북한은 모든 국제대회에 불참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계속 '체육'을 장려하고 체육의 과학화와 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진적 시스템 도입을 강조하며 "체육은 국력을 시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기치 하에 각종 국제대회에서 높은 성과 획득으로 국가 영예를 빛낼 선수 양성을 적극 강조해왔다.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북한판 K리그'인 1부류(1부리그) 축구연맹전 시즌도 다시 재개되고 다수의 군중이 모이는 체육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고 대중적인 종목이 축구임을 감안하면 지난 카타르월드컵의 열기가 북한에서도 뜨거웠을 것이다. 2019년 10월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과도 맞붙었던 북한은 이듬해 4월 코로나19를 이유로 남은 경기 출전을 모두 포기했었기 때문에 아쉬운 면도 있었을 것이라 본다.

월드컵의 또 다른 매력은 개최국의 관광, 대외 무역, 일자리 등 수익창출의 경제적 효과가 큰 메가스포츠 이벤트로서 남북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FIFA 잔년 인판티노 회장이 지난 11월 20일 "어떤 나라도 월드컵을 열 수 있고, 북한이 원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한 발언 또한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2026년 대회부터는 본선 32개 국가에서 48개 국가로 늘어난다. 2030년 대회는 2024년 FIFA 총회에서 결정하게 되므로 개최지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부디 2030년 남북 공동 월드컵유치를 위한 유치위원회 구성 및 단일팀 구성 추진사업이 남북스포츠 교류 재개의 마중물이 되어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앞당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희망한다. 🌸

김동선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기대학교 체육대학장, 교육대학원장, 교육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교류협력 건설팀 자문위원, 대한체육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위원, 민화협 체육교류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민족통일체육연구원 원장 등을 맡고 있다.

⁴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1208/116905326/1>

서해에서 평화기행

김포·강화 한강하구를 가다

글·사진 이영동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1



한강은 파주 탄현에 위치한 오두산통일전망대 앞에서 다시 임진강과 만나 김포와 강화도를 지나 서해로 흘러간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김포, 강화 한강하구를 조강이라고 부른다. 오두산통일 전망대에서 북한의 관산반도를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은 임진강, 뒤쪽은 한강이며 두 강이 만나는 왼쪽의 한강하구를 조강으로 부른다. 조강(祖江)은 할아버지 강이라는 뜻으로 바다처럼 넓은 강을 의미한다. 한강하구는 내륙의 DMZ와 달리 중립수역

에 해당한다. 즉,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내륙의 동해까지는 DMZ이며, 왼쪽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남북의 경계선이 나누어진다. 중립수역은 강화도 말도까지 약 70km에 달하며 남북 간 거리는 900m에서 10km이다. 정전협정과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한강하구의 수역에서 남북 민간선박은 항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불필요한 충돌을 우려해 이 지역에서 한 척의 배도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유엔사가 항행을 허락해주

지 않는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민간선박이 9회 중립수역을 통과한 기록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008년 보고서에서 한강하구에서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채취하면 13조 원대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한강하구에서 공동수로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는 남북이 공유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방법을 마련하였다.

김포 애기봉전망대는 2021년 새롭게 단장하면서 애기봉생태평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애기봉전망대 시절에는 크리스마스트리에 등불을 켤 수 있는 50m 높이의 십자탑 선전물이 있었다. 여기에서 개성까지 20km 남짓으로 개성 시내에서 잘 보이게 했었다. 이제는 새롭게 단장하면서 선전물도 없어지고 문화관광해설사가 탐방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공원은 생태전시관을 둘러보고, 생태탐방로를 따라 걷고 조강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을 조망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 개풍군과의 거리는 한강하구 조강을 사이에 두고 불과 1.4km로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가축과 농기계를 이용해 농사짓는 모습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 전망대에서는 애기봉에 대한 사연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애기봉과 조강나루

병자호란 때 기녀인 '애기'가 사모하던 평안감과 함께 피난길에 올랐다. 그러나 감사는 청나라 오랑캐에 붙잡혀 북으로 끌려가고 애기는 홀로 조강을 건넜다. 이후 애기는 날마다 축갓머리산 꼭대기에 올라 북녘을 바라보며 평안감을 그리워하다 '님이 제일 잘 보이는 봉우리에 물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슬픔 속에 생을 마감한다. 여기에서



1. 애기봉전망대에서 바라본 개풍군.
2. 강화평화전망대에 서면 멀리 개풍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필자를 당황케 하는 부분이 있다. 평화기행 두 번째 이야기에서 소개했듯이 당시 평안감사는 홍명구이며, 평안도의 근왕병을 이끌고 김화(현 철원)에서 유림장군과 함께 장렬히 싸우다 전사했으며 현재 충렬사에 모셔져 있다. 필자의 식견이 짧아서 인지 필자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 조강나루는 한국전쟁 전까지 100여 호의 가구가 살던 큰 마을이 있었다. 조선시대 삼남 지방에서 올라오던 세곡선과 상선들은 썰물이면 한양으로 가지 못하고 조강나루에서 물때를 기다려야 했기에 마을 주막 등에는 매일 많은 상인과 짐꾼 등으로 북적거렸다. 하지만 지금 조강은 적막하기 짝이 없다. 조강나루는 전쟁 후 민통선으로 바뀌어 철조망으로 가로막혔으며, 배 한 척, 집 한 채, 사람 한 명도 볼 수 없는 곳으로 변해 버렸다. 김포에는 평화누리길로 염하강철책길과 조강철책길, 그리고 한강철책길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쉽게 허락되지 않지만, 조강나루에서 용강리까지 걷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연미정과 '평화의 소'

김포와 강화 사이 해협을 염하(鹽河)라고 부른다. 강 같은 바다라는 뜻이다. 강화대교를 건너 강화도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가볼 곳이 연미정이다. 물 흐르는 모습이 마치 제비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연미정은 조강과 염하가 만나는 월곶돈대에 위치하고 있다. 한눈에 탐방객 눈에 띄는 것은 '장무공 황형장군 택지비'이다. 황형장군은 일본의 삼포왜란을 제압했으며, 여진족의 야인의 난을 제압하였다. 이에 황형장군은 무장공이라는 시호와 연미정 일대를 조종에서 하사받았다. 연미정은 정묘호란(1927년)에 후금과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했던 곳이다. 연미정이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은 2008년 민통선에서 해제되면서이다. 연미정에서 북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은 김포, 앞쪽은 북한 개풍군이다. 연미정 북동쪽에 마치 무덤 같은 작은 섬이 있는데 이를 유도라 부른다. 조선시대 썰물 때 배가 잠시 머무르다 간 곳이라고 해서 유도라 부른다. 이 섬은 중립수역 안에 있는 무인도로 백로와 뱀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도는 1996년 장마 때 북한에서 떠내려온 황소가 목격되었다. 1997년 해병대원들이 유도에 들어가 다리를 다쳐 야윈 황소를 구출해왔다. 이 황소는 '평화의 소'로 이름이 붙여졌으며 1998년 제주도 출신 암소(통일의 소)와 짝을 이루었다. 이들은 7마리의 새끼를 낳았고 황소는 2006년 자연사했다. 최근 MBC에서 추적한 바로는 자손이 7대까지 이어져 제주도에서 자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미정 월곶진에는 바다로 흐르는 작은 수로가 있는데 2020년에 탈북자가 재입북했던 장소

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곳이다. 연미정에서 전방초소에 출입신청을 한 후 철책선 해안도로를 따라 10km 거리의 강화평화전망대에 갈 수 있다. 이 길은 강화 나들길 코스에 들어 있지 않지만, 오른쪽 바다 건너 북녘땅을 보면서 걸을 수도 있고 반만 걸을 수도 있다. 붉은 무리를 제압한다는 의미의 제적봉은 군부대에서 전방관측소로 운영되다가 2008년 강화평화전망대로 새롭게 탄생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었다. 지금은 강화제적봉평화전망대로 바뀌었지만, 이 전망대는 군부대 시설과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시설로 나누어져 있다. 한강하구의 연장선인 전망대 전방 약 2.3km 해안을 건너면 북한 개풍군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해안도 중립수역으로 남북한 배는 한 척도 지나가지 않는다. 전망대 건너편 개풍군을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주민의 생활 모습과 학교 등을 조망할 수 있으며 날씨가 맑은 날은 20km 떨어진 송악산과 개성 송수신탑을 볼 수 있다.

최근의 변화된 부분은 북한 지역에 같은 모습의 살림집들이 많이 들어선 것이다. 문화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전망대가 폐쇄되었다가 풀리고 와보니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단다. 서북방향 건너 예성강이 흐르고, 좌측으로는 황해남도 연안군과 백천군의 연백평야가 있고 북한 쌀의 30%를 생산한다고 한다. 개풍군도 대체로 야간에는 불빛이 관측되지 않고 있지만, 추수철 공동탈곡장에서는 야간까지 밝은 불빛이 보인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좌측 중립수역에 개성공단을 대신할 '나들섬 프로젝트'를 구상하기도 했다. 만조 때 4m 높이, 썰물 때 해안이 드러나는 곳에 10m 정도 성토하여 공단을 만든다는 구상이었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구상은 구상대로 끝나고 만다. 전망대 밖에



3. 대룡시장의 상징이었던 교동이발판의 간판. 실향민 지방식 옹은 은퇴하고 딸들이 교동이발판 간판과 이발 기구를 전시킨 채 국숫집을 운영하고 있다.

는 강화 출신 작곡자 최영섭과 같은 강화 출신인 작사자 한상익의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와 망배단이 있다. 1962년 만들어진 이 노래는 1992년 재일 동포 고향방문단이 왔을 때부터 중간에 가사가 바뀌었다.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독자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란다.

대룡시장, 피란민의 삶터에서 먹거리 관광지로

최근 수도권에서 인기 관광지 중 한 곳이 강화 교동도이다. 교동도는 민통선 지역으로 교동대교 입구에서 출입신청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 2010년 예능프로 '1박 2일'에 소개되고 2014년 교동대교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지금은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교동도는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이 모여 새롭게 정착한 곳으로 한때 70%가 실향민이었다. 교동도의 상징 대룡시장은 피난민들이 고향에 되돌아가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향에 있는 연백시장의 모습을 재현한 전형적인 시골 골목시장이다. 하지만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고향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70여 년간 중심지였으며, 60~70년대에서 시간이 멈춘 채 당시의 모습과 시골 정취를 간직하고 있다. 마치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다. 지금은 시장을 만든 실향민 대부분이 은퇴하거나 작고했지만, 인기 있는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2~3년 사이에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실향민 2~3세대와 외지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가게가 생필품 중심에서 먹거리 위주 가게로 바뀌었다. 대룡시장의 대표적인 상징 대룡이발판 주인은 은퇴하였고 딸들이 대룡이발판이라는 간판을 유지한 채 국숫집을 운영하고 있다. 대룡철물점도 대룡철물 카페로 바뀐 채 딸 내외가 운영한다. 그 외 시계점과 동산약방 주인들은 작고하였다. 주말이면 하루에 1만 명이 찾는다는 요즘, 여행 후기에 주전부리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대룡시장이지만, 인기의 시발점인 '시간여행'이라는 옛 정취가 많이 퇴색되어 버려 아쉬움이 남는다. '황세환시계점'처럼 보전하면서 현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시장에서 북쪽으로 가면 지석리 바닷가에 연백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망향대가 있다. 주로 연백 출신 실향민들이 많은 찾은 곳으로 가까이에서 망원경으로 연백평야를 조망할 수 있다. 좀 더 확 트인 공간에서 조망하고 싶으면 화개산(259m)에 올라가는 것도 도전해 볼 만하다. 걸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정상에 화개공원과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탐방객을 기다리고 있다. 🌄

이영동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통일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통일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민화협 상임집행위원장을 역임했으며 DMZ평화네트워크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오랫동안 DMZ 접경지역을 답사하며 평화 해설사로 활약해온 평화통일 운동가이기도 하다.

25년과 50억 년 그리고 안녕

염규현 정책홍보팀 부국장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겨울에 추운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삶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게 추위는 늘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모쪼록 꽃피는 봄이 오면, 움츠러든 마음과 함께 평화의 기운도 활짝 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말 민화협은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 생태공동체 협력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았다. 기후변화가 지구와 특히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남북은 어떻게 힘을 모아 대응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 사뭇 심각한 내용이 이어졌다. 기후변화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치를 초월하는 문제이기에 옹고 그림을 따질

수 없었다. 정치나 이해타산이 개입할 수도 없다. 뺨히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지가 관건일 뿐이다.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한 용어가 난무(!)하고, 온통 영어로 된 각종 기구나 조직, 선언, 회의들이 나열되었지만, 결국 답은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남북 모두에게 닥친 위기이기에,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따지지 말고 각자의 역량을 냉철히 파악한 뒤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이 뛰어난 쪽은 기술을 나누고, 투입할 인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쪽은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는 쪽이 재정을 투여하고, 당장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탄소 중립화를 통해 얻은 배출권 등으로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된다.

북쪽의 산림이 황폐화되고, 이것이 홍수와 가뭄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후과가 남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된다. 왜 '생태공동체'이겠는가. 남북은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기에, 자연 앞에 너와 내가 따로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다. 서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서로 힘을 합해서 말이다.

하지만 2022년의 현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남북 모두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렸고, 각자 자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한껏 겁을 주려 했다. 든든한 동맹을 끌어들여 '나, 이런 사람이야!' 뽐내려 했고, 위험천만한 무기를 바다 건너로 쏘아 올리며, '까불지 마!' 소리치기도 했다. 앞으로 영영 안 볼 사이인 것처럼 한바탕 성질을 부렸다.

무엇을 위함이었을까. 생존? 자존심? 권력의 유지? 아니면 상대방을 불안케 하고 나아가 굴욕을 주기 위해? 무지한 필자는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

는 그 위대한 국익을 위해?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었고, 헤아릴 수 없었다. 2022년은 과연 남북 모두에게 어떤 해로 기억될까?

내 삶에 후회 따위, 많다!

그 무슨 위대한 이념이나 숭고한 의지가 아닌, 순전히 우연의 우연이 겹쳐 남북관계, 통일운동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 26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스물하나 청년이 마흔 중반의 아저씨가 되었다.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별 게 아닌 것도 아니다. 흔히들 거창하게 말하는 사반세기를 한 분야에서 좌충우돌한 것이니, 어찌 사건 사고와 기막힌 장면들이 없었을까. 어찌 눈물 났던 시간과 숨넘어가게 기뻐던 일이 없었을까. 흰머리가 늘어나고, 주름이 생기고, 눈이 나빠지고, 깜빡하는 순간이 늘어나는 동안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을까. 덤덤하긴 한데, 슬쩍 무언가 헛헛한 것 같기도 하다.

참 많은 이들을 만났고 또 헤어졌다. 이미 세상을 등진 이들도 많고, 온갖 영화를 누리다가 지금은 연락조차 어려운 이들도 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눈물 절끔 나는 이들이 있고, 여전히 이가 갈리는(!) 이들도 있다. 다 스승이었고, 도반이었다. 그들에게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은 온전히 내 부족함 때문이었다. 그것도 뭐 별수 없다. 그게 결국 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폼 잡으며 ‘그래도 내 삶에 후회는 없다’ 따위의 말이 절대 아니다.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작고하신 조부께서는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손인 나에게 말씀하시곤 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라. 대신 두

가지만 하지 말아라. 기자질 하지 말고, 이복과 관련된 일 하지 말아라.”

훌륭한 장손은 훗날 이 두 가지를 모두 섭렵하며 그렇게 사반세기를 살았다. 어른 말씀 들어서 손해 볼 것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정말 재미있고, 정말 보람을 느꼈던 시간 역시 적지 않았다는 것을. 파리 눈곱만큼 작은 것일지언정 내 노력으로 남북이 그래도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그리고 지겹게도 단단히 뿌리박혀있는 분단을 깨부수기 위해 나를 노력했다는 것에서 위안을 삼는다. 자랑 맞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동안 민화협은 2022년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무수히 겪어왔다. 좋은 시간도 있었지만, 위기는 늘 있었다. 부디 올해는 어리석지 않은 행동이 더 많아지기를.

앞으로 남아있는 지구의 수명이 약 50억 년이라고 한다. 가늠이 안 된다. 1998년 9월 창립한 민화협은 2023년, 25주년을 맞이한다. 50억 년의 시간 속에서 25년은 티끌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25년이 나에게 가늠조차 되지 않는 50억 년보다 더 소중한다. 그리고 그 25년 중 약 10여 년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와 자부심을 갖는다.

여전히 난 이 근처 어디에선가 암약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다 다시 별안간 출몰할 수도 있다. 남의 동네 선불리 가면 안 된다. 하지만 작별인사는 일단 해야겠다. 그동안 부족한 녀석의 글 참고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길. 함께 했던 동지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



<독자엽서>로 정답과 의견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19호의 정답은 '파친코'입니다. 채택되신 분들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울러 주소를 명확히 보내주세요. 선정의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특집 - '담대한 구상' 톨아보기

현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란 무엇인지, 과제와 전망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 여하에 따라 경제적 수혜가 먼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이전 비핵·개방·3000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다만, 북한이 일체 대화와 교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대한 구상을 펼치기 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새해에는 2022년과 다른 대화와 교류 속에서 남북 관계가 전개되길 희망해봅니다. + 김인호 서울 서초구



기획대담 - 2022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남북관계에서 설득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정책임을 강조하는 기사로 저 역시 환영 지지합니다. 강경책은 강 대 강의 길로 가게 되면서 결국 파탄과 몰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큼니다. 남북관계는 여러모로 각각의 과정을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민화협의 역할과 활동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 송병승 서울 도봉구



새로운 시선

통일은 사건이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서 통일의 주체는 국민이고, '사람' 중심의 통일이 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민족화해>를 접하기 전까지 통일에 대해,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할 만큼 통일의 간절함을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독자들에게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알찬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 오은경 부산 연제구



만나고 싶었습니다

남북평화와 통일에 있어 노동자의 힘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북평화통일은 정치인이나 문화예술인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처럼 노동의 순수한 가치로 연대한 남북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화합과 단결이야말로 평화통일을 향한 마중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은 한반도, 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한 남북 노동자의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 조영민 경기 의정부시



우표로 보는 남북

남과 북의 최초의 우표에 대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란 점은 북한 우표 도안에 태극문양과 태극기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문화에 익숙해져 업서나 우편을 쓸 기회가 점점 없어지는데, 새해를 맞아 연하장을 보내면서 아날로그 방식이 주는 느낌의 미학과 마음의 여유를 느껴보고 싶습니다. 2023년에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꽃피는 봄날처럼 환하게 피워 올라, 남북 간에 업서를 통해서라도 소통을 재개했으면 좋겠습니다. + 변금향 경기 고양시

근하신년

2023년 계묘년(癸卯年)이 밝았습니다.

2022년 민화협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함께하는 민족화해를 꿈꾸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지와

담론을 심도 있게 다져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통일 미래



민화협 후원은 **평화와 통일의 싹을 키우는 것입니다.**



후원 회원이 되시면

- 1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을 드립니다.
- 2 《민족화해》지를 비롯하여, 민화협에서 발간하는 각종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3 민화협 행사 <통일문화축제, 통일기행> 등에 우선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후원금 납부 방법

- 정기후원 CMS(은행)자동이체, 일시후원 등
- 후원금 입금 계좌 예금주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기업은행 221-129760-01-107
- 국민은행 816901-04-099222
- 농협 367-17-017688

※ 민화협은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에 의거 '공익성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우)040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 68, 3층

Tel 02-761-1213

Fax 02-761-6590

www.kcrc.or.kr